

#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적합한 지역일자리 설계방안



#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적합한 지역일자리 설계방안



## 연구진

---

**이제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소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지방 인구감소 등 공동화 현상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

-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방도시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양적 변화뿐 아니라 유소년과 청년층의 비중이 작아지고, 장년과 고령인구의 비중이 커지는 고연령으로 편중되는 방향으로 질적 변화를 겪고 있음
- 인구감소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젊은층 유출을 가속시킴으로써 고령화 및 지역경제 침체를 더욱 가속하는 악순환이 반복
- 이러한 지역들은 일자리 부족뿐 아니라 열악한 교육·문화생활 여건, 저출산 등이 인구 변동의 주된 요인으로 파악(강동우 외, 2018; 구형수 외, 2016; 이상호, 2018)

### □ 지역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설계가 시급

- 지방소멸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비 성향이 높고 인구재생산에 핵심이 되는 젊은 연령층을 유입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
- 그러나 모든 지방소멸 위기지역에서 핵심 연령계층을 유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구감소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지역의 산업과 인구구조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 마련이 필요

### □ 인구감소지역 지원 근거 마련 등 정책적 패키지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소멸지역 일자리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20.12.8.개정)에 명시된 인구구조(고령자, 유소년, 생산연령), 인구감소율과 지속성, 인구이동 추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난 10월 18일 총 89개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 2단계 재정분권(2021.8.11.)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재원을 확보
  - 지방소멸대응기금뿐 아니라 국고보조사업(52개 사업, 2조5,600억 규모)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
- 지방소멸 위기지역에서의 생활서비스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시책 추진이 예상되는바 지방소멸지역 맞춤형 일자리 방안 마련이 필요

#### □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특성과 고용 성장 잠재력 분석

-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산업·고용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을 구분하고, 고용의 성장잠재력을 분석하여 맞춤형 일자리정책에 시사점 도출

#### □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제시

- 국내 일자리 및 고용동향 검토
  - 경제활동인구 변화 및 취업자 구성 변화 추세
-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검토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지방소멸 위기지역 관련 일자리사업 검토
- 일자리 사업의 기본방향 도출
  -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일자리사업의 추진방식을 제안

## 2.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 □ 일자리 동향 및 관련 정책 분석

- 제2장에서는 지난 20년간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구성의 변화 등 일자리 및 고용동향을 살펴보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지방소멸지역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을 분석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①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

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6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중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 시적 일자리 및 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유형

- 사업 목적별로 ①공공업무지원형, ②소득보조형, ③인턴형, ④사회복지봉사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노인 등 특정 계층의 직접적 소득을 보조하는 사업과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
- 대표적인 사업에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과 자활사업,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등이 있음

○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는 젊은 인구의 지역 유입·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입·정착, 지역활력 찾기, 지역다양성 확충 등 3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신규로 시행

-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사업 중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일자리 사업이 유일하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으로 코로나 19에 대응한 청년 고용창출 및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목적을 가짐

○ 소멸 위기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유입·정착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대도시로 떠나는 현실 속에서 청년만을 위한 일자리정책은 실효성이 낮아 보임

○ 따라서 청년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를 위한 일자리정책을 마련하여 소멸 위기지역에서 구인·구직에 대한 미스매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특성 분석

○ 제3장에서는 89개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인구학적, 산업 및 고용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비슷한 유형으로 지역을 분류하여 소멸 위기지역에 적합한 일자리정책 수립에 근거를 마련

- 정주인구, 유소년·생산연령·고령화 비율, 고학력자 비율, 인구이동, 출생률을 통해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산업별 특화지수(LQ), 고용의 성장잠재력, 고용의 질을 통해 산업과 고용의 특성을 파악
-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적합한 일자리를 모색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통해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분류
  - 인구 및 가구 수, 고령화율, 인구밀도, 인구순이동, 인구증가율, 고학력인구비율 등 7개 인구변수와 사업체 및 종사자 수, 1차산업 종사자 수, 제조업 종사자수, 도소매업 종사자수, 숙박업 및 음식점업 종사자수 등 6개의 산업변수 사용
- 총 4개의 유형으로 제1유형에는 15개 지자체가 해당하고, 제2유형에는 31개, 제3유형은 18개, 제4유형은 25개의 지자체로 구성
- 1유형(서비스업 중심 도시형)
  - (인구 특성) ①전반적으로 인구 및 가구 규모가 가장 크고, 인구밀도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방소멸 위기지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큼
  - ②청년 비율이 가장 높고, 고령화율은 가장 낮은 유형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와 고학력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아 지방소멸 위기지역 중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비교적 낮음
  - (산업 특성) ①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제4유형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며, 산업별로 살펴보면 1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와 종사자 규모를 가짐
  - ②도소매업의 경우 전체 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비가 중심인 도시 유형
- 2유형(농림어업 중심 농촌형)
  - (인구 특성) ①제4유형과 함께 청년 비율은 낮고, 고령화율은 높으며,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유형으로 전형적인 농촌의 저밀도 초고령사회의 특징을 보임

- ②제4유형과 함께 낮은 고학력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인적자원도 매우 부족한 실정
- (산업 특성) ①제4유형을 제외하면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가장 적으며, 생산연령인구 대비 고용 비율도 가장 낮음
- ②농림어업 종사자 기준 특화도(LQ)가 평균 7.8로 지역 내 1차산업인 농림어업이 두드러지는 지역
- 3유형(제조업 중심 농촌형)
  - (인구 특성) ①인구 및 가구 특성이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평균적인 값과 가장 유사하지만, 인구밀도의 경우 평균적인 값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촌지역임
  - (산업 특성) ①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평균보다 크게 나타남
  - ②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비율이 가장 두드러져, 평균적으로 사업체의 11.9%, 종사자의 20.9%가 제조업에 해당함. 이는 다른 유형에서의 제조업 비중과 비교하여 크게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임
- 4유형(산업기반 취약 농촌형)
  - (인구 특성) ①평균 인구 및 가구 수가 가장 적고, 인구밀도 역시 가장 낮은 유형으로 평균 고령화율이 31.8%로 4개 유형 중 가장 높은 초고령사회이며, 청년비율은 가장 낮아 향후에도 고령화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임
  - ②대부분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며, 특히 일부 지역들은 산간에 위치한 지역으로 4개 유형 중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라 할 수 있음
  - (산업 특성) ①절대적인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가 가장 작은 것은 물론, 농림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비중이 가장 낮아 산업적으로 가장 부족한 지역에 해당
  - ②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전국적 차원에서도 특화된 것(LQ 1.4)으로 나타지만, 절대적인 산업 규모가

매우 작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여가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

#### □ 지방소멸 위기지역 맞춤형 유형별 일자리 전략 제시

- 제4장에서는 지방소멸 위기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방향과 그에 따른 유형별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은 ①지방소멸 위기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 일자리 선순환 체계 구축, ②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주체 연계 일자리 창출, ③지역맞춤형 산업전략에 의한 유형화 전략 수립으로 설정
-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 많은 청장년층이 지속적으로 지역을 떠나고,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지 못하는 지역기업은 성장기반이 약화되어 쇠퇴일로에 있는 악순환의 고리 형성
  -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노동시장은 단기간에 시장의 힘만으로는 인구를 유입할만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한 실정임
- 지방소멸 위기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산업 전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지역별로 구체적인 주력산업을 타겟으로 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하여 우수인재 영입, 지역기업 성장, 지역인구 지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전략 수립 시에 먼저 해당 지역의 산업 및 혁신자원에 대한 철저한 지역여건 분석, 지역의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이를 통한 미래 발전전략의 정립, 기업가적 발견 과정을 통한 지역 산업 육성전략의 마련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지역경제 구조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전략에는 지역산업의 고도화, 다각화, 핵심품목 전이, 구조개혁 등 4가지 유형이 제시될 수 있지만,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인구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이들 지역에서 채택가능한 지역산업 전략은 지역산업의 고도화 전략과 지역산업의 다각화 전략이 될 수 있음

- 지역산업 고도화는 지역의 기존 특화 분야를 유지하면서 기존 활동의 현대화, 정책수단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전략임
  - 지역산업 다각화는 지역의 기존 특화 분야와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를 결합하여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임
  - 지역산업 핵심품목 전이는 지역산업의 특화 분야를 새로운 분야로 전환하는 것으로 새로운 특화 분야의 적소 시장 및 규모의 경제 확보가 관건임
  - 지역경제 구조개혁은 급진적 혁신을 통한 산업부문 및 기술 도메인의 새로운 결합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발전으로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유형임
- 앞선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지방소멸 위기지역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대별되는데, 3차산업 중심의 도시형, 1차산업 중심의 농촌형, 2차산업 중심의 농촌형, 산업기반 취약 농촌형임
- 지역산업 고도화 전략에 의한 지역 일자리 전략은 해당 지역별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중심의 기존 특화 분야를 유지하되, 기존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임
- 한편, 지역산업의 다각화 전략은 지역의 기존 특화 분야와 함께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를 결합하여 다각화하는 전략이므로, 지역특화도 측면에서는 주력산업이 아니나, 지역이 성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산업에 대해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임
- 지방소멸 위기지역 유형별 일자리 전략은 기존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직접일 자리를 창출하는 기본형(지역산업 고도화)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에 대한 확장형(지역산업의 다각화)으로 제안
- 기본형은 각 유형별 특화산업(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연령과 기업의 규모 기준을 완화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역의 혁신주체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인재 양성 및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을 제안
- 지방소멸 위기지역 전체 사업체의 90% 이상이 종사자 10명 미만인 영세 기업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5명 수준

- 확장형은 기본형과 동일하게 직접일 자리를 지원하지만, 특화산업 외에 종사자수가 급증하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추진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

- 1. 연구배경 ..... 3
- 2. 연구목적 ..... 5

제2절 연구 방법 ..... 6

**제2장 | 일자리 동향 및 관련 제도·정책 분석**

제1절 일자리 및 고용동향 ..... 9

- 1.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추세(2001~2020년) ..... 9
- 2. 취업자 구성 변화 추세 ..... 21

제2절 일자리 관련 정책분석 ..... 25

-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25
- 2.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일자리사업 ..... 31

**제3장 | 지방소멸 위기지역 특성 분석**

제1절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특성 ..... 37

- 1. 인구학적 특성 ..... 37
- 2.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산업 및 고용 특성 ..... 40

제2절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유형화 ..... 51

- 1. 유형화 개요 ..... 51
- 2. 유형화 결과 ..... 55
- 3. 유형별 특성 ..... 58

**제4장 | 지방소멸 위기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제1절 기본방향 ..... 67

1. 지방소멸위기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 일자리 선순환 체계 구축 ...	67
2.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주체 연계 일자리 창출 .....	68
3. 지역맞춤형 산업전략에 의한 유형화 전략 수립 .....	71
제2절 지역 맞춤형 유형별 전략 .....	73
1. 기본형(지역산업 고도화) .....	73
2. 확장형(지역산업의 다각화) .....	80

<b>【참고문헌】</b> .....	<b>83</b>
---------------------	-----------

<b>【부록】</b> .....	<b>85</b>
-------------------	-----------

〈표 2-1〉 경제활동참가율 변화(2001~2020년) .....	10
〈표 2-2〉 성별 취업자수와 고용률의 변화(2001~2020년) .....	11
〈표 2-3〉 연령대별 고용률의 변화(2001~2020년) .....	13
〈표 2-4〉 성별 실업률의 변화(2001~2020년) .....	14
〈표 2-5〉 연령대별 실업률의 변화(2001~2020년) .....	15
〈표 2-6〉 시·도별 고용률의 변화(2001~2020년) .....	17
〈표 2-7〉 시·도별 실업률의 변화(2001~2020년) .....	19
〈표 2-8〉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추세(2001~2020년) .....	21
〈표 2-9〉 임금근로자의 근로 형태별 변화 추세(2003~2020년) .....	23
〈표 2-10〉 근로 형태별 월평균 임금 변화(2004~2020년) .....	24
〈표 2-11〉 연도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	25
〈표 2-1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사업 예시 .....	26
〈표 2-13〉 고용장려금 세부유형 .....	28
〈표 2-14〉 유형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	29
〈표 2-15〉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 현황 .....	29
〈표 2-16〉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사업 구성 .....	32
〈표 2-17〉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	33
〈표 2-18〉 디지털일자리(행정안전부)사업 내용 .....	33
〈표 3-1〉 인구 특성 .....	38
〈표 3-2〉 기초자치단체 간 인구이동 특성 .....	39
〈표 3-3〉 산업별 사업체 비율(지자체 평균) .....	41
〈표 3-4〉 산업별 종사자 비율(지자체 평균) .....	43
〈표 3-5〉 종사자 규모에 따른 사업체 현황(비율) .....	44
〈표 3-6〉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산업별 특화지수(LQ) 현황 .....	46
〈표 3-7〉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제조업 중분류별 특화지수(LQ) 현황 .....	47
〈표 3-8〉 고용 성장 1순위 업종 및 지역 현황 .....	48
〈표 3-9〉 총 종사자 대비 상용종사자 비율 .....	50

〈표 3-10〉 상용종사자 비율별 사업체 비율 .....	50
〈표 3-11〉 유형 구분에 사용한 변수 현황 .....	53
〈표 3-12〉 거리의 종류 .....	53
〈표 3-13〉 유형별 지자체 구성 .....	57
〈표 3-14〉 각 군집 유형별 주요 변수의 평균 비교 .....	63

〈그림 1-1〉 인구감소지역 분포 현황	4
〈그림 2-1〉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9
〈그림 2-2〉 성별 취업자수 및 고용률 추세	12
〈그림 2-3〉 연령대별 고용률 추세	13
〈그림 2-4〉 성별 실업률의 변화 추세	15
〈그림 2-5〉 연령대별 실업률 추세	16
〈그림 2-6〉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	22
〈그림 2-7〉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월평균 임금 격차 추세	24
〈그림 3-1〉 계층적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56
〈그림 3-2〉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유형별 분포	58
〈그림 3-3〉 1유형 지역 분포 현황	60
〈그림 3-4〉 2유형 지역 분포 현황	60
〈그림 3-5〉 3유형 지역 분포 현황	62
〈그림 3-6〉 4유형 지역 분포 현황	62
〈그림 4-1〉 지역맞춤형 지역혁신생태계 구축방향	69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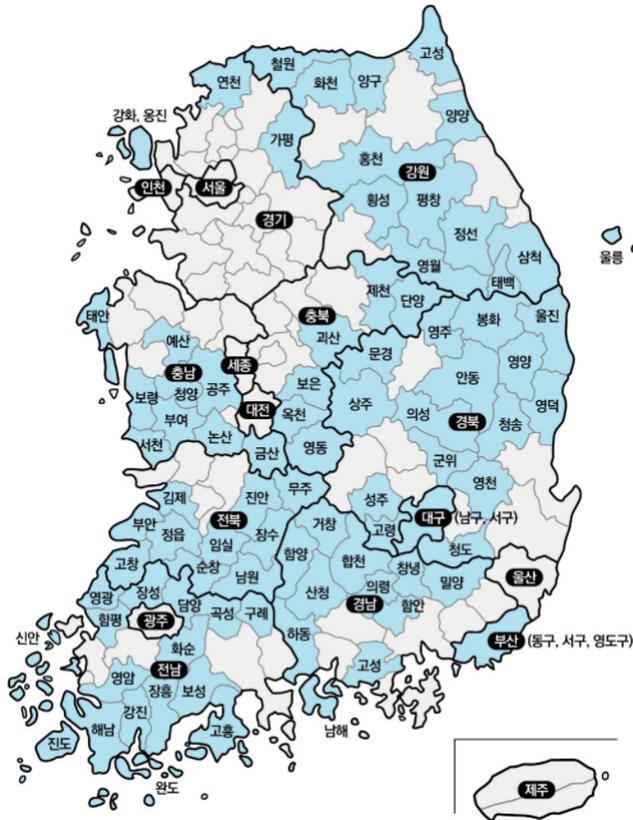
## 1. 연구배경

- 지방 인구감소 등 공동화 현상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
  -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방도시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양적 변화뿐 아니라 유소년과 청년층의 비중이 작아지고, 장년과 고령인구의 비중이 커지는 고연령으로 편중되는 방향으로 질적 변화를 겪고 있음
  - 인구감소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젊은층 유출을 가속시킴으로써 고령화 및 지역경제 침체를 더욱 가속하는 악순환이 반복
  - 이러한 지역들은 일자리 부족뿐 아니라 열악한 교육·문화생활 여건, 저출산 등이 인구 변동의 주된 요인으로 파악(강동우 외, 2018; 구형수 외, 2016; 이상호, 2018)
- 지역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설계가 시급
  - 인구의 유출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비 성향이 높고 인구재생산에 핵심이 되는 젊은 연령층을 유입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
  - 그러나 모든 지방소멸 위기지역에서 핵심 연령계층을 유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구감소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지역의 산업과 인구구조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 마련이 필요

□ 인구감소지역 지원 근거 마련 등 정책적 패키지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소멸지역  
일자리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20.12.8.개정)에 명시된 인구구조(고령자, 유소년, 생산연령), 인구감소율과 지속성, 인구이동 추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난 10월 18일 총 89개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그림 1-1〉 인구감소지역 분포 현황



- 2단계 재정분권(2021.8.11.)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재원을 확보
  - 지방소멸대응기금뿐 아니라 국고보조사업(52개 사업, 2조5,600억 규모)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
- 지방소멸 위기지역에서의 생활서비스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시책 추진이 예상되는바 지방소멸지역 맞춤형 일자리 방안 마련이 필요

## 2. 연구목적

### 고용 동향 및 관련 정책 분석 후 시사점 도출

- 국내 일자리 및 고용동향 검토
  - 경제활동인구 변화 및 취업자 구성 변화 추세
-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검토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지방소멸 위기지역 관련 일자리사업 검토

###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특성과 고용 성장 잠재력 분석

-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인구·산업·고용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을 구분하고, 고용의 성장잠재력을 분석하여 맞춤형 일자리정책에 시사점 도출

###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제시

- 일자리정책 및 사업의 기본방향 도출
  -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일자리사업의 유형과 추진방식을 제안

## 제2절 연구 방법

### □ 연구의 범위

- 2021년 10월 18일 지정·고시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및 산업적 특성을 통해 지역의 유형을 구분하고, 고용 잠재력 분석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제시

### □ 연구 방법

-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조사
  - 범부처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법률, 정책보고서 등 선행연구 및 문헌 검토
-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특성 분석
  - 89개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지역의 인구학적·산업적 특성과 고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특성에 따른 지역 유형을 구분
-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고용 잠재력 분석
  -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현 산업구조에 근간하기보다는 구인 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을 토대로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이 큼
  - 최근 3년간 고용자수의 변화를 통해 고용 성장의 잠재력을 가진 산업을 도출함으로써 신규 지역일자리 창출의 근거를 마련
-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일자리 전문가 등 관계자 자문회의, 워크숍 개최를 통한 브레인스토밍
  - 지방소멸 위기지역 일자리 관련 현황 및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 제2장

# 일자리 동향 및 관련 제도·정책 분석

● 제1절 일자리 및 고용동향

● 제2절 일자리 관련 정책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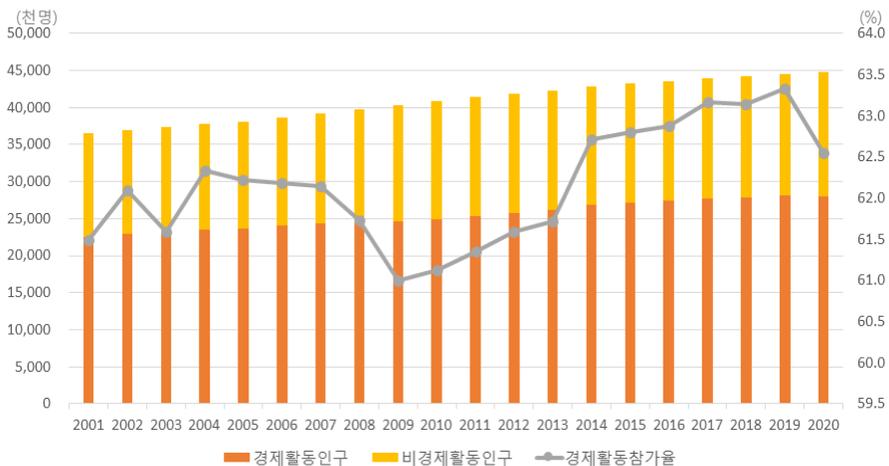
## 제1절 일자리 및 고용동향

## 1.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추세(2001~2020년)

## □ 생산연령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 15세 이상 생산연령인구는 2001년 약 3,661만 명에서 2020년 현재 약 4,479만 명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년 동안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9년을 정점(63.3%)으로 2020년 현재 62.5%로 하락

〈그림 2-1〉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표 2-1〉 경제활동참가율 변화(2001~2020년)

(단위: 천명, %)

년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비경제활동인구
2001	36,608	22,511	61.5	14,097
2002	37,014	22,982	62.1	14,032
2003	37,410	23,043	61.6	14,367
2004	37,772	23,544	62.3	14,228
2005	38,120	23,718	62.2	14,402
2006	38,632	24,024	62.2	14,608
2007	39,180	24,351	62.2	14,829
2008	39,775	24,551	61.7	15,224
2009	40,301	24,582	61.0	15,719
2010	40,825	24,956	61.1	15,869
2011	41,387	25,389	61.3	15,998
2012	41,857	25,781	61.6	16,076
2013	42,304	26,108	61.7	16,196
2014	42,795	26,836	62.7	15,959
2015	43,239	27,153	62.8	16,086
2016	43,606	27,418	62.9	16,188
2017	43,931	27,748	63.2	16,183
2018	44,182	27,895	63.1	16,287
2019	44,504	28,186	63.3	16,318
2020	44,785	28,012	62.5	16,77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 취업자 및 고용률

- 고용률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59.0~60.1% 범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8.8~59.8% 사이에서 정체를 보인 뒤

2014년부터 60%대를 회복·유지

- 남성의 고용률은 2001년 71.1%에서 2019년까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70%대를 유지하다 2020년에 69.8%로 70%대 고용률이 붕괴
- 반면 여성의 고용률은 2001년 47.7%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 50%를 넘겼고, 2019년에 정점(51.6%)을 찍은 후 2020년 현재 50.7%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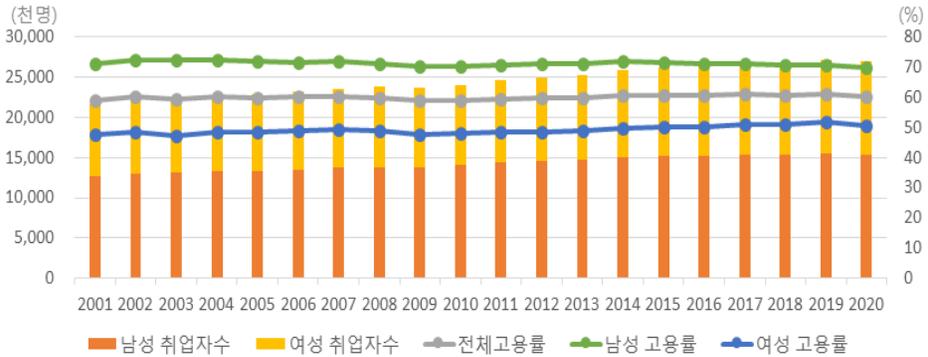
〈표 2-2〉 성별 취업자수와 고용률의 변화(2001~2020년)

(단위: 천명, %)

연도	15세이상 인구			취업자수			고용률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2001	36,608	17,739	18,870	21,614	12,609	9,005	59.0	71.1	47.7
2002	37,014	17,953	19,062	22,232	12,988	9,243	60.1	72.3	48.5
2003	37,410	18,166	19,244	22,222	13,090	9,131	59.4	72.1	47.4
2004	37,772	18,361	19,411	22,682	13,276	9,406	60	72.3	48.5
2005	38,120	18,539	19,580	22,831	13,323	9,508	59.9	71.9	48.6
2006	38,632	18,826	19,806	23,188	13,481	9,707	60	71.6	49
2007	39,180	19,128	20,052	23,561	13,712	9,849	60.1	71.7	49.1
2008	39,775	19,442	20,333	23,775	13,835	9,940	59.8	71.2	48.9
2009	40,301	19,708	20,593	23,688	13,840	9,847	58.8	70.2	47.8
2010	40,825	19,978	20,846	24,033	14,041	9,992	58.9	70.3	47.9
2011	41,387	20,269	21,119	24,527	14,333	10,193	59.3	70.7	48.3
2012	41,857	20,501	21,356	24,955	14,568	10,387	59.6	71.1	48.6
2013	42,304	20,728	21,576	25,299	14,745	10,554	59.8	71.1	48.9
2014	42,795	20,989	21,806	25,897	15,057	10,840	60.5	71.7	49.7
2015	43,239	21,222	22,018	26,178	15,156	11,022	60.5	71.4	50.1
2016	43,606	21,401	22,205	26,409	15,241	11,168	60.6	71.2	50.3
2017	43,931	21,573	22,357	26,725	15,368	11,356	60.8	71.2	50.8
2018	44,182	21,699	22,484	26,822	15,372	11,450	60.7	70.8	50.9
2019	44,504	21,886	22,618	27,123	15,463	11,660	60.9	70.7	51.6
2020	44,785	22,035	22,750	26,904	15,381	11,523	60.1	69.8	50.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2〉 성별 취업자수 및 고용률 추세



○ 연령대별 고용률의 변화를 보면, 30대와 50대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15~29세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 고용률이 감소한 상태로 정체 현상을 보임

- 30대의 경우 2001년 72.7%로 시작해서 2009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다 2019년에 정점(76.0%)을 기록한 후 2020년 현재 75.3%를 유지
- 50대의 고용률은 2001년 66.9%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9년 75.4%까지 상승하고 2020년 현재 74.3%를 기록
- 60세 이상에서는 2001년 38.0%에서 시작하여 2010년 36.2%까지 하락한 후 2020년 현재까지 지속 성장하여 42.4%의 고용률을 보임
- 반면 15~29세의 고용률은 2004년 45.4%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며 2020년 42.2%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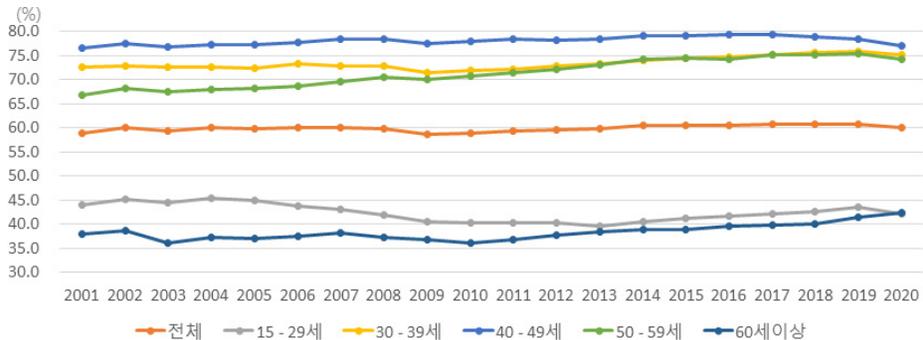
〈표 2-3〉 연령대별 고용률의 변화(2001~2020년)

(단위: %)

연도	전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1	59.0	44.0	72.7	76.6	66.9	38.0
2002	60.1	45.2	73.0	77.5	68.2	38.7
2003	59.4	44.6	72.7	76.9	67.6	36.2
2004	60.0	45.4	72.7	77.4	68.0	37.3
2005	59.9	45.0	72.4	77.2	68.2	37.1
2006	60.0	43.8	73.3	77.8	68.6	37.5
2007	60.1	43.2	73.0	78.4	69.6	38.1
2008	59.8	41.9	73.0	78.4	70.5	37.3
2009	58.8	40.6	71.4	77.6	70.2	36.9
2010	58.9	40.4	72.0	77.9	70.9	36.2
2011	59.3	40.4	72.2	78.4	71.6	36.8
2012	59.6	40.3	72.8	78.3	72.3	37.7
2013	59.8	39.5	73.3	78.4	73.2	38.4
2014	60.5	40.5	74.1	79.1	74.2	39.0
2015	60.5	41.2	74.4	79.1	74.4	39.0
2016	60.6	41.7	74.7	79.3	74.3	39.5
2017	60.8	42.1	75.3	79.4	75.3	39.9
2018	60.7	42.7	75.7	79.0	75.2	40.1
2019	60.9	43.5	76.0	78.4	75.4	41.5
2020	60.1	42.2	75.3	77.1	74.3	42.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3〉 연령대별 고용률 추세



## □ 실업자 수 및 실업률

- 전체 실업률은 2001년에 4.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 3.1%까지 떨어진 후 2020년 현재 3.9%까지 지속 상승
  - 남성의 경우, 2020년 3.9%로 2001년 4.5%보다 0.6%p 감소되었지만, 여성의 실업률은 2020년 4.0%로 지난 20년 동안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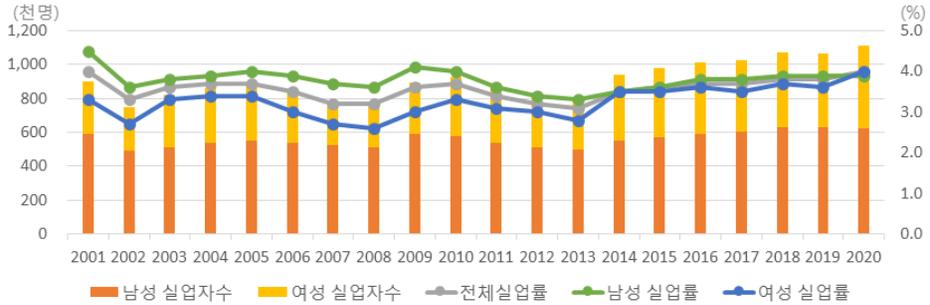
〈표 2-4〉 성별 실업률의 변화(2001~2020년)

(단위: 천명, %)

연도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실업률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2001	22,511	13,198	9,313	898	589	309	4.0	4.5	3.3
2002	22,982	13,478	9,504	751	490	261	3.3	3.6	2.7
2003	23,043	13,601	9,442	821	511	311	3.6	3.8	3.3
2004	23,544	13,811	9,733	862	535	326	3.7	3.9	3.4
2005	23,718	13,876	9,842	887	553	334	3.7	4.0	3.4
2006	24,024	14,021	10,003	836	540	295	3.5	3.9	3.0
2007	24,351	14,234	10,118	790	522	268	3.2	3.7	2.7
2008	24,551	14,344	10,207	776	509	266	3.2	3.6	2.6
2009	24,582	14,429	10,153	894	589	305	3.6	4.1	3.0
2010	24,956	14,622	10,335	924	580	343	3.7	4.0	3.3
2011	25,389	14,869	10,520	863	536	327	3.4	3.6	3.1
2012	25,781	15,077	10,704	826	509	317	3.2	3.4	3.0
2013	26,108	15,245	10,862	808	500	308	3.1	3.3	2.8
2014	26,836	15,607	11,229	939	550	389	3.5	3.5	3.5
2015	27,153	15,728	11,426	976	572	404	3.6	3.6	3.5
2016	27,418	15,836	11,583	1,009	594	415	3.7	3.8	3.6
2017	27,748	15,975	11,773	1,023	607	416	3.7	3.8	3.5
2018	27,895	16,002	11,893	1,073	630	443	3.8	3.9	3.7
2019	28,186	16,090	12,097	1,063	627	437	3.8	3.9	3.6
2020	28,012	16,005	12,007	1,108	624	484	4.0	3.9	4.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4〉 성별 실업률의 변화 추세



〈표 2-5〉 연령대별 실업률의 변화(2001~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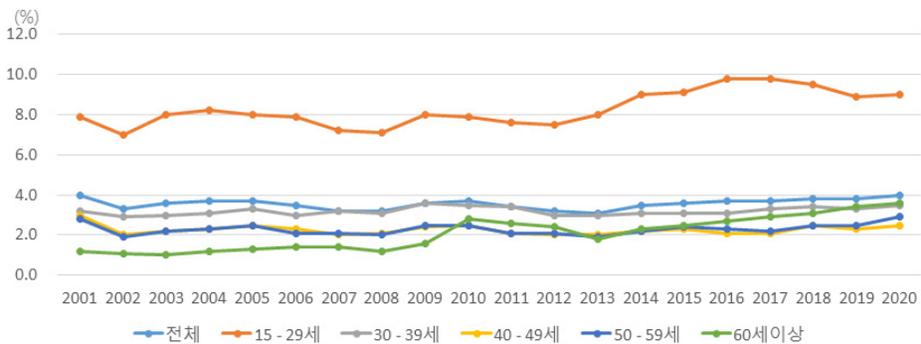
(단위: %)

연령계층별	전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001	4.0	7.9	3.2	3.0	2.8	1.2
2002	3.3	7.0	2.9	2.0	1.9	1.1
2003	3.6	8.0	3.0	2.2	2.2	1.0
2004	3.7	8.2	3.1	2.3	2.3	1.2
2005	3.7	8.0	3.3	2.5	2.5	1.3
2006	3.5	7.9	3.0	2.3	2.1	1.4
2007	3.2	7.2	3.2	2.0	2.1	1.4
2008	3.2	7.1	3.1	2.1	2.0	1.2
2009	3.6	8.0	3.6	2.4	2.5	1.6
2010	3.7	7.9	3.5	2.5	2.5	2.8
2011	3.4	7.6	3.4	2.1	2.1	2.6
2012	3.2	7.5	3.0	2.0	2.1	2.4
2013	3.1	8.0	3.0	2.0	1.9	1.8
2014	3.5	9.0	3.1	2.2	2.2	2.3
2015	3.6	9.1	3.1	2.3	2.4	2.5
2016	3.7	9.8	3.1	2.1	2.3	2.7
2017	3.7	9.8	3.3	2.1	2.2	2.9
2018	3.8	9.5	3.4	2.5	2.5	3.1
2019	3.8	8.9	3.3	2.3	2.5	3.4
2020	4.0	9.0	3.5	2.5	2.9	3.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대별 실업률을 보면, 15~29세는 2012년까지 7.0~8.2%의 실업률을 보이다가 2016년에 최고치인 9.8%까지 증가하다 2020년 현재 9.0%로 다소 둔화
- 60세 이상에서는 2009년까지 1%대의 실업률을 유지하다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 현재 3.6%로 연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나머지 30대, 40대, 50대 실업률은 해마다 소폭의 등락은 있지만, 특징적인 큰 변동은 나타나지 않음

〈그림 2-5〉 연령대별 실업률 추세



### □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 2020년을 기준으로 지난 20년 동안 시·도별 고용률 변화를 보면, 2001년에 비해 부산,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
  - 대전, 강원, 충북은 2001년 전국평균 고용률(59.0%)보다 낮았지만, 이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0년 현재 전국평균보다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동시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2001년 대비 각각 4.2%p, 4.1%p, 5.4%p 상승)
  - 제주는 지난 20년간 가장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 변동 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6〉 시·도별 고용률의 변화(2001~2020년)

(단위: %)

시도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01	59.0	58.8	55.9	57.0	59.1	54.9	56.5	58.1	-
2002	60.1	59.5	58.2	58.5	60.1	56.6	58.5	60.0	-
2003	59.4	59.3	55.3	57.7	59.2	54.8	57.2	59.2	-
2004	60.0	60.3	55.6	58.7	59.2	55.4	57.0	59.8	-
2005	59.9	60.5	55.9	58.3	58.9	56.0	55.8	59.0	-
2006	60.0	60.5	56.1	57.9	59.5	55.7	56.2	58.1	-
2007	60.1	60.8	56.1	57.3	60.0	56.7	56.7	59.6	-
2008	59.8	60.1	55.3	56.5	59.3	56.4	57.2	60.3	-
2009	58.8	58.5	54.2	56.4	59.2	56.4	56.7	58.7	-
2010	58.9	59.2	54.3	57.0	59.6	56.9	56.4	59.1	-
2011	59.3	60.0	54.5	56.8	60.7	56.6	56.9	59.8	-
2012	59.6	59.9	55.9	58.4	61.6	56.4	57.3	59.8	-
2013	59.8	59.9	56.1	57.9	61.3	57.2	57.5	59.0	-
2014	60.5	60.5	56.7	58.7	61.3	58.8	59.1	58.3	-
2015	60.5	60.0	56.3	59.4	61.1	58.5	59.6	59.0	-
2016	60.6	60.0	56.2	59.3	61.8	58.1	59.7	59.0	-
2017	60.8	60.2	56.3	58.8	61.7	59.0	58.9	59.8	61.2
2018	60.7	59.6	55.7	58.2	62.9	59.4	58.7	59.0	61.8
2019	60.9	60.0	56.6	57.9	62.5	59.3	59.8	59.1	62.5
2020	60.1	59.3	55.6	56.6	61.3	58.7	60.7	58.1	62.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6〉 (계속)

(단위: %)

시도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1	60.0	56.7	57.8	61.3	57.4	62.9	63.5	59.5	66.5
2002	60.8	58.6	58.9	62.1	57.2	64.3	63.9	60.0	67.8
2003	59.8	57.2	57.4	61.7	57.5	64.3	63.6	61.5	69.5
2004	60.7	58.0	58.4	63.2	57.4	64.1	63.9	62.1	68.6
2005	60.5	57.6	58.3	62.7	57.5	64.2	63.6	61.0	68.9
2006	60.7	58.3	58.3	63.9	57.8	63.9	63.5	60.8	69.1
2007	60.5	57.6	58.6	64.6	58.7	64.0	62.9	61.1	68.2
2008	60.5	57.6	59.1	62.1	58.4	63.8	62.7	61.4	68.0
2009	59.2	57.5	59.1	60.2	57.8	64.1	62.0	60.1	67.1
2010	59.2	56.0	59.5	60.2	57.0	62.3	62.3	59.7	65.2
2011	59.3	56.2	59.5	61.0	57.6	62.3	61.9	60.7	66.0
2012	59.8	56.9	58.8	61.5	57.5	63.2	62.2	60.2	66.7
2013	60.2	56.3	60.0	62.7	58.6	62.6	62.1	60.3	66.4
2014	61.6	56.9	62.0	62.4	58.3	62.2	63.2	60.2	67.3
2015	61.7	57.9	62.4	62.3	59.2	62.8	62.4	60.6	68.5
2016	61.7	58.2	62.0	61.7	59.9	62.7	62.4	60.6	69.3
2017	62.1	61.0	62.6	62.3	58.6	62.1	62.5	60.9	70.9
2018	62.0	60.7	63.3	63.5	58.3	62.4	61.6	61.4	68.4
2019	61.9	62.3	62.9	63.7	59.3	63.4	61.7	61.3	68.4
2020	60.3	60.8	63.2	62.4	59.9	63.9	61.1	60.6	67.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시·도별 실업률은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모든 지역에서 큰 폭으로 낮아졌으며, 2001년 대비 2020년의 실업률을 비교해보면,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을 제외한 10개 지역에서 낮아짐
- 2001년 당시 부산의 실업률이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으나 2002년에 큰 폭(1.8%p)으로 떨어진 후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면서 2020년에는 4.2%로 하위 4번째 수준의 실업률을 나타냄
  - 반면 2002년 당시 실업률(2.3%)이 가장 낮았던 강원은 2006년에 1.3%까지 내려갔다가 이후 지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0년에는 7번째로 낮은 실업률을 보임

〈표 2-7〉 시·도별 실업률의 변화(2001~2020년)

(단위: %)

시도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001	4.0	4.8	5.7	4.8	4.7	5.1	4.5	3.4	-
2002	3.3	4.3	3.9	4.2	4.0	3.8	3.8	2.5	-
2003	3.6	4.6	4.1	4.4	4.4	4.6	3.8	3.2	-
2004	3.7	4.7	4.4	4.2	4.5	4.3	4.2	3.5	-
2005	3.7	4.8	4.4	4.3	4.5	4.4	4.5	3.4	-
2006	3.5	4.6	4.2	3.7	4.4	4.2	4.5	2.8	-
2007	3.2	4.1	4.0	3.6	4.0	4.0	4.1	2.5	-
2008	3.2	3.9	3.8	3.7	3.9	3.8	3.7	3.4	-
2009	3.6	4.5	4.3	4.3	4.5	3.8	3.7	4.1	-
2010	3.7	4.7	3.6	4.0	5.0	3.5	3.7	3.5	-
2011	3.4	4.5	3.6	3.7	4.7	3.1	3.6	2.7	-
2012	3.2	4.2	3.9	3.3	4.5	2.7	3.7	2.6	-
2013	3.1	3.9	3.8	3.3	4.1	2.8	3.0	2.1	-
2014	3.5	4.4	3.8	3.8	4.7	2.8	3.4	2.7	-
2015	3.6	4.2	4.1	3.5	5.0	2.9	3.4	2.9	-
2016	3.7	4.2	3.9	4.1	4.9	3.1	3.2	3.8	-
2017	3.7	4.5	4.6	4.0	4.6	2.9	3.4	3.5	2.3
2018	3.8	4.8	4.1	4.4	4.3	3.8	4.2	4.6	2.3
2019	3.8	4.4	3.7	3.7	4.4	3.7	4.2	4.2	2.7
2020	4.0	4.6	4.2	3.9	4.6	3.9	4.4	4.2	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7〉 (계속)

(단위: %)

시도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1	3.5	2.3	3.4	2.9	3.2	3.0	2.7	3.3	2.5
2002	2.8	1.8	2.5	2.7	2.5	2.3	2.2	2.5	2.2
2003	3.4	2.0	3.1	2.9	2.7	2.3	2.2	2.5	1.9
2004	3.6	2.1	2.7	2.4	2.8	2.4	2.6	2.4	2.4
2005	3.8	1.8	2.3	2.7	2.5	2.3	2.5	2.6	2.5
2006	3.5	1.3	2.2	2.5	2.6	1.7	2.4	2.3	2.1
2007	3.3	1.9	2.3	2.4	2.4	1.8	2.1	2.4	2.1
2008	3.2	1.7	2.2	2.5	2.2	2.0	2.1	2.2	1.8
2009	3.8	2.1	2.1	3.1	2.0	1.6	2.7	3.1	1.6
2010	4.0	2.6	2.2	3.0	2.2	2.1	2.8	2.8	1.8
2011	3.4	2.2	2.4	2.4	2.3	2.0	2.6	2.2	1.7
2012	3.3	2.5	2.0	2.3	2.0	1.6	2.5	1.8	1.5
2013	3.0	2.3	2.0	2.8	2.0	2.1	3.1	2.1	1.8
2014	3.3	3.1	3.0	3.3	2.5	2.9	2.9	2.5	2.0
2015	3.9	3.2	2.6	3.5	1.7	2.5	3.0	2.6	1.9
2016	3.9	2.8	2.6	3.2	2.1	3.0	3.2	3.3	2.2
2017	3.9	2.6	2.2	2.8	2.5	3.2	2.8	2.9	1.9
2018	3.8	2.9	2.4	3.1	2.7	2.8	4.1	3.0	2.0
2019	3.8	3.6	3.1	2.9	2.7	2.6	3.9	3.8	2.1
2020	4.0	3.9	3.2	3.5	2.5	2.4	4.0	4.0	2.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 취업자 구성 변화 추세

###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2001~2020년)

- 지난 20년 동안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12.4%p 증가하였고, 자기 사업을 하는 비임금근로자는 동일한 비율만큼 감소

〈표 2-8〉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추세(2001~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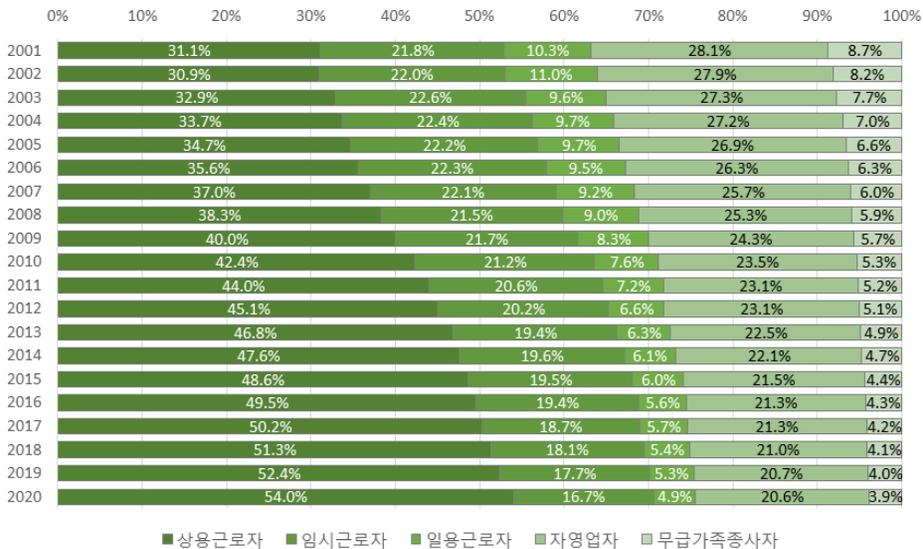
(단위: 천명, %)

연도	총 취업자수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임금 근로자	상용	임시	일용
2001	21,614	7,955(36.8)	6,071	1,884	13,659(63.2)	6,717	4,722	2,220
2002	22,232	8,026(36.1)	6,212	1,814	14,206(63.9)	6,879	4,891	2,436
2003	22,222	7,773(35.0)	6,066	1,707	14,449(65)	7,301	5,015	2,133
2004	22,682	7,746(34.2)	6,161	1,585	14,936(65.8)	7,651	5,092	2,194
2005	22,831	7,645(33.5)	6,141	1,503	15,186(66.5)	7,923	5,059	2,205
2006	23,188	7,580(32.7)	6,109	1,471	15,608(67.3)	8,248	5,163	2,197
2007	23,561	7,467(31.7)	6,048	1,419	16,095(68.3)	8,715	5,202	2,178
2008	23,775	7,418(31.2)	6,005	1,413	16,357(68.8)	9,105	5,122	2,130
2009	23,688	7,102(30.0)	5,749	1,352	16,586(70.0)	9,479	5,134	1,973
2010	24,033	6,922(28.8)	5,643	1,279	17,111(71.2)	10,178	5,107	1,826
2011	24,527	6,930(28.3)	5,657	1,273	17,596(71.7)	10,786	5,045	1,765
2012	24,955	7,034(28.2)	5,768	1,266	17,921(71.8)	11,250	5,032	1,639
2013	25,299	6,934(27.4)	5,703	1,232	18,365(72.6)	11,847	4,919	1,600
2014	25,897	6,939(26.8)	5,720	1,219	18,959(73.2)	12,319	5,069	1,570
2015	26,178	6,776(25.9)	5,622	1,153	19,402(74.1)	12,716	5,114	1,572
2016	26,409	6,740(25.5)	5,614	1,126	19,669(74.5)	13,062	5,124	1,483
2017	26,725	6,791(25.4)	5,682	1,110	19,934(74.6)	13,428	4,992	1,514
2018	26,822	6,739(25.1)	5,638	1,101	20,084(74.9)	13,772	4,851	1,460
2019	27,123	6,683(24.6)	5,606	1,077	20,440(75.4)	14,216	4,795	1,429
2020	26,904	6,573(24.4)	5,531	1,042	20,332(75.6)	14,521	4,483	1,3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01년 63.2%에서 2020년 75.6%로 현저히 증가하였고, 고용계약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은 지속 감소한 반면,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2001년에 비해 22.9%p로 크게 증가한 결과임
- 비임금근로자의 80% 이상인 자영업자는 여전히 전체 취업자의 20% 이상을 차지하지만, 지난 20년간 해마다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2-6〉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



□ 임금근로자의 근로 형태별 현황

- 지난 18년 동안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3.7%p 감소하였고, 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감소한 만큼 비정규직이 증가
  -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고용 안정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에 35.8%에서 2014년 32.2%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현재 36.3%까지 상승

〈표 2-9〉 임금근로자의 근로 형태별 변화 추세(2003~2020년)

(단위: 천명, %)

연도	전체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2003	14,195(100)	9,573(67.4)	4,622(32.6)	3,028	929	1,681
2004	14,618(100)	9,211(63)	5,407(37)	3,611	1,069	1,947
2005	14,948(100)	9,480(63.4)	5,469(36.6)	3,612	1,037	1,896
2006	15,420(100)	9,956(64.6)	5,465(35.4)	3,649	1,127	1,918
2007	16,006(100)	10,274(64.2)	5,732(35.8)	3,580	1,199	2,204
2008	16,258(100)	10,770(66.2)	5,488(33.8)	3,322	1,231	2,147
2009	16,609(100)	10,826(65.2)	5,783(34.8)	3,528	1,428	2,288
2010	17,189(100)	11,475(66.8)	5,715(33.2)	3,298	1,623	2,300
2011	17,715(100)	11,662(65.8)	6,053(34.2)	3,474	1,708	2,452
2012	17,941(100)	11,987(66.8)	5,954(33.2)	3,427	1,828	2,304
2013	18,403(100)	12,426(67.5)	5,977(32.5)	3,446	1,883	2,234
2014	18,992(100)	12,869(67.8)	6,123(32.2)	3,529	2,035	2,137
2015	19,474(100)	13,166(67.6)	6,308(32.4)	3,655	2,236	2,229
2016	19,743(100)	13,262(67.2)	6,481(32.8)	3,671	2,488	2,245
2017	20,006(100)	13,428(67.1)	6,578(32.9)	3,725	2,663	2,112
2018	20,045(100)	13,431(67)	6,614(33.0)	3,823	2,709	2,071
2019	20,559(100)	13,078(63.6)	7,481(36.4)	4,785	3,156	2,045
2020	20,446(100)	13,020(63.7)	7,426(36.3)	4,608	3,252	2,07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기준

- 임금근로자의 근로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는 지난 17년간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음
  - 2004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65.2%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52.9%로 나타나 정규직 근로자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여 임금 격차의 간격이 더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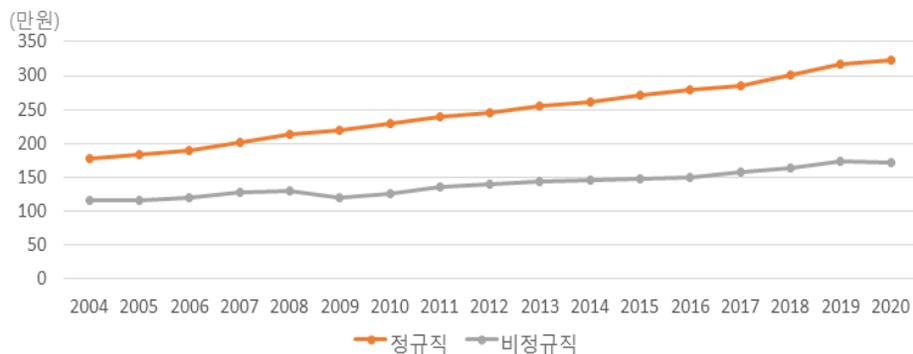
〈표 2-10〉 근로 형태별 월평균 임금 변화(2004~2020년)

(단위: 만원)

연도	전체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2004	154.1	176.9	115.3
2005	159.1	184.0	115.8
2006	165.6	190.5	120.2
2007	174.6	200.7	127.9
2008	184.7	212.6	129.9
2009	185.5	220.2	120.5
2010	195.0	229.4	126.0
2011	203.3	238.8	135.0
2012	210.9	246.2	139.8
2013	218.9	255.1	143.4
2014	224.0	261.1	145.9
2015	230.4	270.2	147.3
2016	237.2	279.9	149.8
2017	243.0	285.1	156.9
2018	255.8	300.9	164.4
2019	264.3	316.5	172.9
2020	268.1	323.4	17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기준

〈그림 2-7〉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월평균 임금 격차 추세



## 제2절 일자리 관련 정책분석

###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념 및 유형

-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의거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을 의미
  - 202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규모는 30.6조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25.5조 원 대비 5.1조 원(20.0%)이 증가하였고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5%p 상승한 5.5%임(국회예산정책처, 2020)

〈표 2-11〉 연도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단위: 조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a)	2021(안) (b)	증감 (b-a)	(b-a)/a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A)	15.9	18.0	21.2	25.5	30.6	5.1	20.0
정부총지출 (B)	400.5	428.5	469.6	512.3	555.8	43.5	8.5
A/B	4.0	4.2	4.5	5.0	5.5		-

주: 본예산 기준이며, 각 연도의 일자리 예산은 2019년부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된 바우처 서비스 관련 사업예산이 제외된 금액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1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I」

- OECD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련 공공지출을 9가지 유형으로 분류·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기초하여 ①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6개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국회예산정책처, 2020)

-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유형
  - 사업 목적별로 ①공공업무지원형, ②소득보조형, ③인턴형, ④사회복지봉사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노인 등 특정 계층의 직접적 소득을 보조하는 사업과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
  - 대표적인 사업에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과 자활사업,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등이 있음

〈표 2-1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유형별 주요 내용 및 사업 예시

유형	주요 내용	예시
직접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소득보조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li> <li>-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복지부)</li> <li>-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복지부)</li> <li>- 자활사업(복지부)</li> <li>-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고용부)</li> </ul>
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업자의 취업 및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실업위험 감소를 위해 직무능력 향상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li> <li>- 전문기술능력이나 현장직무훈련 등 바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취업성이 강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일배움카드(고용부)</li> <li>-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고용부)</li> <li>-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고용부)</li> </ul>
고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알선,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노동시장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구직자의 직업탐색과 고용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성공패키지지원(고용부)</li> <li>-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li> <li>-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li> <li>- 직업안정기관운영(고용부)</li> </ul>
고용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촉진, 실직위험이 있는 재직자의 계속고용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일자리 질 향상 등의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li> <li>- 청년층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자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취업자 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부)</li> <li>-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li> <li>- 모성보호육아지원(고용부)</li> <li>-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고용부)</li> <li>-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고용부)</li> </ul>

유형	주요 내용	예시
창업지원	-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현금·용자·시설·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 - 대출, 시설임대, 컨설팅 등 창업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 또는 직접 자금을 제공	- 창업기업자금(중기부) - 창업사업화지원(중기부)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실업보험,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등 공적 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	- 구직급여(고용부) - 체당금지급(고용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1년도 예산안 총괄분석Ⅱ」

- 직업훈련은 실업자 및 재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기관·기업·대학 등을 활용하여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유형임
  -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등이 주요 사업에 해당
- 고용서비스는 직업상담·진로지도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해 구직자의 직업탐색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직원 채용과 선발을 지원하는 사업유형
  - 주로 고용서비스 기관을 통해 구직자에게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요 사업에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등이 해당
- 고용장려금은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에 처한 재직자의 계속고용 지원,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나 수당을 지급하는 유형
  - 세부 유형에는 고용창출형, 고용유지형, 고용안정형, 모성보호형으로 구분되며, 주요 사업에는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육아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해당

〈표 2-13〉 고용장려금 세부유형

유형	내용
고용창출장려금	사용자나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실업자 등 목표 집단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구조조정 등 경제적 이유로 위험 상황에 처한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시간선택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려금
모호보호장려금	출산으로 고용불안에 처한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방지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장려금

자료: 고용노동부(2019.12),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창업지원은 실업자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직접적인 지원(현금) 또는 간접적인 지원(창업자금대부, 시설제공,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유형
  - 주요 사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자금(융자)과 창업사업화지원 등이 해당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은 실업자에게 현금 급여지급 등으로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유형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유형에는 ① 실업급여 등 구직지원, ② 사회보험료 지원, ③ 기업 도산 또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나 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포함
  - 주요 사업에는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와 체당금지급 등이 해당

〈표 2-14〉 유형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안)		증감	
	본예산(A)	추경	예산안(B)	비중	(B-A)	(B-A)/A
직접일자리	28,587	29,790	31,164	10.2	2,577	9.0
직업훈련	22,434	23,531	22,754	7.4	320	1.4
고용서비스	11,994	13,559	17,694	5.8	5,700	47.5
고용장려금	64,950	86,315	82,697	27.0	17,747	27.3
창업지원	23,585	24,263	26,342	8.6	2,756	11.7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103,447	140,348	125,387	41.0	21,940	21.2
합계	254,998	317,806	306,039	100.0	51,041	2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1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I」

〈표 2-15〉 중앙부처 직접일자리사업 현황

연번	부처	세부사업	소유형
1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사회봉사복지형
2	고용부	사회공헌활동지원(사회공헌활동지원)	사회봉사복지형
		사회공헌활동지원(신종년경력형일자리)	소득보조형
3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사고성재해집중관리(공단) (고위험업종안전보건지킴이))	공공업무지원형
4	농림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식품분야해외인턴십지원, 농업법인취업지원)	인턴형
5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ODA)(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글로벌농업인재양성))	인턴형
6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사회봉사복지형
7	문체부	박물관진흥지원(등록사립박물관전문인력지원)	인턴형
8	문체부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공공업무지원형
9	문체부	예술인력육성2(예술인력재교육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인턴형

연번	부처	세부사업	소유형
10	문체부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이야기할머니현장활동등)	사회봉사복지형
11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R&D)(출연연맞춤형인력양성사업)	인턴형
12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공업무지원형
13	복지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	사회봉사복지형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 대한노인회외사업)	소득보조형
14	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소득보조형
15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소득보조형
16	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체인력지원	공공업무지원형
17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공공업무지원형
18	산림청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공업무지원형
19	산림청	국제산림협력(해외산림인턴지원)	인턴형
20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서비스도우미)	공공업무지원형
21	산림청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소득보조형
22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여성인턴)	인턴형
23	행안부	국가기록물정리	공공업무지원형
24	행안부	지역공동체일자리(지특)(마을기업, 취약계층공공근로사업)	소득보조형
25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하천쓰레기수거사업)	소득보조형
26	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소득보조형
27	환경부	환경지킴이(1. 자연환경안내원(정규직전환대상제외), 2. 국립공원지킴이(재난구조대제외), 3. 주민감시관리요원, 4.5대강환경지킴이)	소득보조형
28	농림부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농식품청년해외개척단)	인턴형
29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및일자리운영(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인턴형
30	특허청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지원(온라인위조상품재택모니터링지원)	소득보조형
31	해수부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청년수출개척단)	인턴형
32	행안부	공공기관빅데이터활용청년인턴십운영(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	인턴형
33	행안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책지원형, 민간취업연계형)	인턴형

자료: 고용노동부(2020),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2.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일자리사업

### □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개요

- 젊은 인구의 지역 유입·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입·정착, 지역활력 찾기, 지역다양성 확충 등 3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2021년 예산안 40대 중점프로젝트」에 포함되어 2021년부터 신규로 시행(기획재정부, 2020)
  - 유입·정착 분야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청년 정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일자리·청년공동체 활성화지원(행정안전부), 귀농·귀촌활성화(농림축산식품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사업으로 구성
  - 지역활력 찾기 분야는 도시재생, 어촌 뉴딜 등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국토교통부), 어촌뉴딜 300(해양수산부), 농촌공간 정비 프로젝트(농림축산식품부),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문화체육관광부) 등 12개 사업으로 구성
  - 지역다양성 확충 분야는 다문화·외국인 등 다양한 주민에 대한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통합체계 구축(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여성가족부), 또바기 체육돌봄(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사업으로 구성

〈표 2-16〉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사업 구성

(단위: 개)

분야	주요 내용	주요 사업	사업수
유입·정착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청년 정착기반 조성	- 디지털일자리, 청년공동체 활성화지원(행안부) - 귀농귀촌활성화(농식품부)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중기부) 등	10
지역활력 찾기	도시재생, 어촌 뉴딜 등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 도시재생(국토부) - 어촌뉴딜 300(해수부) -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농식품부) -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문체부) 등	12
지역다양성 확충	다문화·외국인 등 다양한 주민에 대한 포용성 제고	- 지역사회 통합체계 구축(행안부)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여가부) - 또바기 체육돌봄(문체부) 등	5

주: 사업수는 내역사업 기준이며, 세부사업 전체가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에 포함된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1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I」

- 2021년도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예산안은 2조 3,223억원으로 전년도 1조 8,337억 원 대비 4,886억 원(26.6%) 증가
  - 유입·정착 분야 예산안은 1조 6,117억원으로 전년 대비 2,920억 원(22.1%) 증가하였고, 지역활력 찾기 분야 예산안은 6,9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11억 원(38.0%) 증가하였으며, 지역다양성 확충 분야 예산안은 1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원(49.5%) 증가
  - 부처별로 보면, 2021년도 예산안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부처는 국토교통부 8,363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7,750억 원, 해양수산부 5,219억 원, 행정안전부 1,137억 원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사업 중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일자리 사업이 유일하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으로 코로나 19에 대응한 청년 고용창출 및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목적을 가짐

〈표 2-17〉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단위: 개, 억원, %)

구분	사업수	2020예산 (A)	2021예산안 (B)	증감		
				B-A	(B-A)/A	
합계	27	18337	23223	4886	26.6	
분야별	유입·정착	10	13197	16117	2920	22.1
	지역활력 찾기	12	5029	6940	1911	38.0
	지역다양성 확충	5	111	166	55	49.5
부처별	국토교통부	2	6957	8363	1406	20.2
	농림축산식품부	7	6237	7750	1513	24.3
	해양수산부	2	4344	5219	875	20.1
	행정안전부	9	225	1137	912	405.3
	여성가족부	1	289	330	41	14.2
	보건복지부	1	133	170	37	27.8
	산림청	1	60	130	70	116.7
	중소벤처기업부	1	88	88	-	-
	문화체육관광부	2	-	30	30	순증
	금융위원회	1	4	4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1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I」

〈표 2-18〉 디지털일자리(행정안전부)사업 내용

구분	내용
목적	코로나19에 대응한 청년 고용 창출 및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
내용	언택트, 온라인플랫폼 등 코로나 대응 사업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관련 신산업 분야 사업장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기업지원금(인건비) 등을 지원
수혜자	청년
사업기간	2021년~
2021 예산안	78,367백만 원
재원	일반회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1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I」



## 제3장

# 지방소멸 위기지역 특성 분석

제1절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특성

제2절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유형화



## 제1절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특성

## 1. 인구학적 특성

## □ 인구 및 가구

-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9.6%인 498만 명, 256만 세대가 거주
  -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평균 거주인구는 약 5만 6천 명이며, 이는 전국 시·군·구 평균(22만 6천 명)은 물론, 강원도(8만 5천 명), 전라남도(8만 4천 명) 평균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치임
-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하지만,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경우 17.2%로 유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은 지방소멸 위기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비해 크게 낮음
  -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총 3,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1.4%를 차지하는 반면, 지방소멸 위기지역에서는 62.3%(310만 명)를 차지
-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고령화율은 29.8%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음
  - 전국적으로는 고령화율이 16.4%로 고령사회에 해당하며, 일부 지방의 경우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도 함
  - 세종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과 그에 수반되는 기업 유입, 주변 지역으로부터 신혼부부 유입으로 인하여 고령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고학력자는 지역의 인적자본에 대한 경쟁력을 대리하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위기지역의 경우 고학력자<sup>1)</sup> 비율이 15.8%에 그침

- 전국적으로는 고학력자 비율이 30% 전후로 나타나며, 일부 지방의 경우 20% 전후로 나타남
- 세종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에 의해 43.5%에 달함

〈표 3-1〉 인구 특성

(단위: 명, 세대, %)

구분	총인구	총가구	유소년비율	생산연령비율	고령화율	고학력자비율
전국	51,829,023	23,093,108	12.2	71.4	16.4	28.1
서울	9,668,465	4,417,954	10.3	73.6	16.1	38.4
부산	3,391,946	1,530,431	10.7	69.9	19.4	27.1
대구	2,418,346	1,056,627	11.8	71.7	16.6	26.4
인천	2,942,828	1,267,956	12.3	73.7	14.0	22.8
광주	1,450,062	633,582	13.4	72.4	14.2	30.4
대전	1,463,882	652,783	12.6	73.0	14.4	32.0
울산	1,136,017	476,893	13.6	73.8	12.6	23.3
세종시	355,831	144,275	20.1	70.1	9.8	43.5
경기	13,427,014	5,676,401	13.5	73.3	13.2	29.4
강원	1,542,840	736,301	11.0	68.2	20.7	22.9
충북	1,600,837	745,644	12.3	69.7	18.0	22.1
충남	2,121,029	983,153	12.9	68.0	19.1	20.4
전북	1,804,104	836,660	11.7	66.9	21.4	23.7
전남	1,851,549	893,152	11.5	65.0	23.5	18.2
경북	2,639,422	1,254,662	11.3	66.9	21.7	18.7
경남	3,340,216	1,484,601	12.9	69.8	17.4	22.4
제주	674,635	302,033	14.2	70.1	15.7	26.3
소멸지역	4,988,175	2,559,536	17.2	53.0	29.8	15.8
최대	170,700	83,437	23.0	63.1	40.6	23.5
최소	9,077	5,312	9.8	45.2	19.7	9.9

출처: 행정안전부(2020)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2020), 「인구동향조사」, 「인구총조사」

1) 본 연구에서 고학력자 기준은 4년제 대학교 수료 이상으로 함

## □ 인구의 전입 및 전출

-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경우 2020년 기준 총 41만여 명의 인구가 유출되고, 37만여 명이 유입되어 약 4만여 명의 순유출이 발생

〈표 3-2〉 기초자치단체 간 인구이동 특성

(단위: 명, 명/천명)

구분	전입량	전출량	순이동	조출생률
전국	4,809,085	4,809,085	0	5.3
서울	1,133,445	1,198,295	-64,850	5.0
부산	336,062	350,409	-14,347	4.5
대구	224,294	241,129	-16,835	4.6
인천	281,240	296,988	-15,748	5.5
광주	144,732	150,815	-6,083	5.1
대전	158,876	169,973	-11,097	5.1
울산	87,181	100,765	-13,584	5.8
세종시	48,889	35,864	13,025	10.0
경기	1,310,068	1,141,695	168,373	5.9
강원	117,545	112,088	5,457	5.1
충북	110,958	107,504	3,454	5.4
충남	169,665	168,924	741	5.7
전북	116,132	124,626	-8,494	4.5
전남	146,066	155,820	-9,754	5.3
경북	178,832	195,810	-16,978	4.9
경남	199,021	215,679	-16,658	5.0
제주	46,079	42,701	3,378	6.0
소멸지역 전체	371,653	411,559	-39,906	4.5
최대	16,795	20,316	1,746	10.7
최소	1,030	1,184	-8,332	2.7

출처: 통계청(2020), 「국내인구이동통계」

- 7대 광역시의 경우 절대적인 인구규모가 큰 만큼 인구의 전입, 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순유출로 인한 인구가 감소가 진행 중임
  -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인접 지역인 강원, 충북, 충남에서는 순유입이 나타났으며, 세종시는 공공기관 이전뿐 아니라 세종시 인근 지역에서 결혼한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거주지로 활발한 인구유입이 진행되고 있음
  -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우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인구 유출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소멸 위기지역의 출생률은 인구 천 명당 평균 4.5명으로 전국 평균(5.3명)보다 낮으며, 높은 고령화율을 고려하면 출생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출생률의 경우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전국적으로 5~6명으로 나타남

## 2.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산업 및 고용 특성<sup>2)</sup>

### □ 지자체별 평균 사업체

-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사업체는 평균 5,330개 기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음
  - 전국 지자체 평균으로는 1만 8,233개이며, 서울 및 경기의 경우 3만 개를 상회하였음
  - 평균 사업체 수가 가장 적은 시도는 전남으로 7,358개였으며, 전남 지역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지방소멸 위기지역을 제외할 경우 그 값이 더욱 커져 위기지역과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됨

---

2) 산업 및 고용의 특성은 통계청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하였음.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조사 개별 단위(사업체)의 상세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 지역 및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나 종사자가 지나치게 소수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마스킹 된다는 단점이 있음. 이에 따라 통계청(KOSIS)에서 공표하고 있는 집계 데이터와는 값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표 3-3〉 산업별 사업체 비율(지자체 평균)

단위: 개, %

구분	사업체 (평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전국	18,238	0.1	0.0	10.6	0.1	0.2	3.5	24.6	9.8	18.8	1.1	1.0	4.0	2.8	1.8	0.3	4.6	3.6	3.0	10.0
서울	32,945	0.0	0.0	7.0	0.0	0.1	2.6	26.7	11.5	16.1	2.8	1.4	5.3	5.2	2.0	0.2	4.3	3.5	2.9	8.4
부산	18,147	0.0	0.0	10.5	0.0	0.2	3.1	27.4	9.3	18.4	0.7	1.1	4.2	2.6	1.8	0.2	4.4	3.3	2.5	10.2
대구	26,368	0.0	0.0	12.6	0.0	0.2	3.2	25.9	10.0	16.9	0.6	1.0	3.6	2.3	1.4	0.2	5.3	3.5	2.8	10.2
인천	20,624	0.0	0.0	12.2	0.0	0.3	3.1	22.7	13.0	18.1	0.5	0.9	4.1	2.0	1.5	0.2	4.1	3.7	3.4	10.1
광주	24,741	0.0	0.0	7.5	0.3	0.1	4.4	25.7	9.1	16.8	0.7	1.3	4.5	2.8	1.9	0.2	5.7	4.0	3.5	11.4
대전	23,926	0.0	0.0	7.0	0.1	0.1	3.5	25.6	10.9	18.2	1.1	1.2	3.8	2.9	1.8	0.2	4.9	4.2	3.3	11.3
울산	17,411	0.0	0.0	8.9	0.1	0.3	3.8	23.1	8.8	22.3	0.4	1.0	3.7	2.3	1.8	0.2	5.6	3.4	3.5	10.9
세종시	18,041	0.1	0.0	7.2	0.1	0.4	3.3	18.9	6.3	21.3	1.2	1.1	8.5	3.1	2.2	0.7	7.5	4.9	3.3	9.7
경기	30,140	0.1	0.0	14.3	0.0	0.2	3.3	22.7	10.1	17.2	0.8	0.8	4.7	2.5	1.6	0.2	5.0	3.8	3.2	9.5
강원	8,156	0.3	0.1	6.1	0.2	0.3	5.1	23.0	7.5	27.1	0.6	1.1	2.6	2.0	1.9	0.5	4.2	3.2	3.3	11.0
충북	12,138	0.2	0.1	10.7	0.1	0.4	4.2	23.6	8.8	21.5	0.5	0.9	2.8	2.0	2.0	0.4	4.1	3.6	3.3	10.8
충남	11,776	0.3	0.1	10.8	0.1	0.4	4.1	24.4	8.5	21.2	0.5	0.9	3.1	2.0	1.8	0.4	4.0	3.7	3.0	10.8
전북	11,006	0.3	0.1	8.6	0.1	0.3	3.9	26.0	9.1	18.4	0.6	1.1	2.9	2.1	1.7	0.6	5.0	4.1	2.8	12.1
전남	7,358	0.4	0.5	9.0	0.3	0.4	4.8	26.3	7.9	20.6	0.6	1.1	2.0	1.7	1.7	0.8	4.1	3.7	2.7	11.5
경북	10,296	0.2	0.1	12.7	0.1	0.4	4.4	23.9	8.2	21.3	0.5	1.0	2.4	1.7	1.5	0.5	4.2	3.4	2.7	10.7
경남	15,931	0.1	0.0	13.4	0.1	0.3	3.7	23.1	7.8	21.8	0.4	1.0	3.2	1.9	1.5	0.4	4.8	3.4	2.6	10.4
제주	33,049	0.6	0.0	4.0	0.1	0.2	3.8	23.1	9.3	30.0	0.5	1.0	3.3	2.1	2.6	0.3	4.3	3.1	2.9	8.8
소멸지역	5,330	0.5	0.3	10.9	0.2	0.4	4.8	25.1	7.4	22.6	0.5	1.0	1.9	1.6	1.5	0.8	3.4	3.5	2.4	11.0
최대	18699	2.2	22.4	36.3	1.2	1.2	13.3	36.9	13.0	50.4	1.1	2.8	4.1	3.7	5.0	2.7	5.4	5.6	4.7	15.5
최소	1308	0.0	0.0	3.4	0.0	0.1	2.0	14.5	3.8	12.3	0.2	0.5	0.1	0.3	0.6	0.2	1.8	1.4	1.3	6.1

출처: 통계청 MDIS, 전국사업체조사(2020), 마이크로데이터 가공

참고1: 붉은 음영은 타 지역보다 높은 값을, 푸른색 음영은 낮은 값을 의미함

참고2: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 건설업, G: 도소매업, H: 운수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보험업, L: 부동산업, M: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 산업분류별 사업체 현황

- 지방소멸 위기지역 사업체의 산업별 구성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중이 높은 산업이 확인됨
  - 농림어업과 광업 등 1차 산업 사업체 비율은 각각 0.5%와 0.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강원도와 제주도와 같이 관광산업이 매우 발달한 곳으로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부문의 경우 0.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경우 3~4배 정도의 사업체가 있음
- 반면에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낮음

### □ 산업분류별 종사자 현황

- 산업별 종사자 구성 역시 농림어업과 광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농림어업과 광업 등 1차 산업 종사자 비율 각각 0.5%와 0.3%였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종사자 비율은 사업체 비율과 마찬가지로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서비스업 부문 종사자 비율도 5.6%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 중 10.7%인데,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두드러짐. 이는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으로 해당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임
- 반면에 지방소멸 위기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산업 종사자 비율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표 3-4〉 산업별 종사자 비율(지자체 평균)

단위: 개, %

구분	종사자 (평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전국	99,228	0.2	0.1	18.1	0.3	0.5	6.6	14.5	5.1	10.5	2.7	3.1	2.4	5.0	5.2	3.4	7.4	8.9	2.0	4.0
서울	209,080	0.0	0.0	5.1	0.1	0.2	6.9	17.2	5.1	9.4	6.9	5.1	3.2	9.3	9.0	2.7	6.7	7.7	1.8	3.6
부산	91,590	0.2	0.0	14.6	0.3	0.5	7.0	16.0	7.5	11.3	1.2	3.5	2.4	3.3	5.8	3.2	7.0	10.2	1.7	4.3
대구	120,992	0.0	0.0	18.0	0.3	0.4	6.4	16.0	5.0	10.5	1.3	3.6	2.5	2.9	4.7	3.2	8.4	10.4	1.9	4.5
인천	109,249	0.0	0.0	22.4	0.4	0.6	5.2	13.5	7.6	10.5	0.9	2.3	2.2	2.9	4.7	3.5	7.0	10.0	2.1	4.1
광주	126,375	0.1	0.0	13.6	0.3	0.4	9.3	14.9	4.8	10.2	1.5	3.6	2.9	3.3	5.0	3.1	8.5	11.6	2.2	4.7
대전	126,684	0.1	0.0	10.0	0.3	0.5	7.1	14.6	4.8	10.5	2.4	3.5	2.4	7.6	6.2	4.3	9.1	10.5	1.9	4.5
울산	106,637	0.0	0.1	33.2	0.4	0.4	7.2	10.7	4.5	10.0	0.7	2.7	1.7	3.1	3.4	2.7	6.7	7.2	1.7	3.5
세종시	125,410	0.1	0.1	16.4	0.4	0.5	5.0	7.7	3.3	9.7	1.1	1.6	3.6	5.4	3.4	17.4	11.4	8.1	1.7	3.2
경기	171,056	0.1	0.0	24.9	0.2	0.5	5.5	14.0	5.0	9.8	2.2	2.0	2.5	5.2	4.1	2.4	7.4	8.3	2.2	3.8
강원	37,236	0.5	0.7	9.2	0.6	0.7	8.9	13.3	4.3	16.2	1.3	3.5	1.8	2.6	3.8	6.1	8.8	9.7	3.5	4.7
충북	67,405	0.4	0.1	28.6	0.2	0.7	6.8	11.4	4.2	10.4	0.8	2.1	1.6	3.0	4.0	4.2	7.1	8.4	2.1	3.9
충남	64,930	0.5	0.1	30.7	0.7	0.7	5.9	11.8	4.1	10.5	0.7	2.0	1.5	2.3	3.6	3.6	7.2	8.6	1.6	3.8
전북	51,432	0.5	0.1	16.3	0.4	0.7	7.0	14.3	4.4	10.9	1.0	3.4	1.8	3.1	3.3	4.9	8.7	12.0	2.2	5.0
전남	35,195	1.0	0.3	15.8	1.0	0.9	10.1	13.6	5.4	11.0	1.0	2.8	1.4	2.2	3.3	5.7	7.2	10.8	2.1	4.4
경북	50,002	0.4	0.1	27.8	0.6	0.8	6.6	12.0	4.3	10.7	0.8	2.2	1.4	2.4	2.8	4.5	7.3	9.3	1.9	4.1
경남	79,302	0.2	0.1	28.9	0.3	0.7	6.0	12.4	4.3	11.1	0.7	2.5	2.0	2.5	2.9	3.5	7.0	9.0	1.8	4.0
제주	143,152	0.9	0.1	4.3	0.5	0.4	7.1	16.2	5.4	21.4	1.6	2.9	1.7	2.7	4.5	5.1	7.7	8.8	4.1	4.6
소멸지역	18,788	0.5	0.3	16.5	0.3	0.4	8.5	15.8	4.9	15.2	0.2	2.5	1.3	1.7	2.5	5.6	5.5	10.7	2.3	5.3
최대	72197	6.1	20.3	55.9	13.4	2.2	20.0	26.0	14.8	37.0	1.6	10.3	2.8	5.3	14.1	21.8	11.0	27.3	23.2	9.8
최소	3714	0.0	0.0	3.0	0.0	0.0	2.9	8.8	1.7	6.2	0.0	0.6	0.0	0.0	0.0	1.6	1.4	1.2	0.6	2.2

출처: 통계청 MDIS, 전국사업체조사(2020), 마이크로데이터 가공

참고: 붉은 음영은 타 지역보다 높은 값을, 푸른색 음영은 낮은 값을 의미함.

#### □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

- 각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에 따라 영세기업과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했을 때, 91.8%에 해당하는 기업이 종사자 10명 미만의 영세기업임

- 사업체 당 평균 종사자 수는 5.4명임

-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시도에서 영세기업 비율은 90% 이상이며, 최댓값(제주)과 최솟값(세종)의 차이는 3%p로 대동소이함
  - 서울,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전국 평균(91.8%)보다 큰 값을 가짐
-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경우 사업체 당 평균 종사자와 사업체 규모에서 일반 지역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
  - 사업체 당 평균 종사자는 3.9명으로 가장 적으며, 영세기업 비율이 94.2%로 일반지역보다 높은 특징을 보임

〈표 3-5〉 종사자 규모에 따른 사업체 현황(비율)

(단위: %)

구분	평균 종사자수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전국	5.4	91.8	7.0	1.1	0.10
서울	6.3	91.4	7.2	1.3	0.18
부산	5.0	92.4	6.4	1.1	0.09
대구	4.6	93.1	5.9	1.0	0.06
인천	5.3	91.6	7.2	1.1	0.08
광주	5.1	92.3	6.5	1.1	0.08
대전	5.3	92.6	6.2	1.1	0.11
울산	6.1	91.9	6.5	1.4	0.12
세종	7.0	90.4	7.8	1.5	0.26
경기	5.7	90.8	7.9	1.2	0.08
강원	4.6	92.9	6.2	0.9	0.06
충북	5.6	91.3	7.2	1.3	0.11
충남	5.5	91.7	7.0	1.2	0.09
전북	4.7	92.6	6.3	1.0	0.06
전남	4.8	92.4	6.5	1.0	0.06
경북	4.9	92.5	6.4	1.0	0.07
경남	5.0	92.4	6.5	1.1	0.06
제주	4.3	93.4	5.8	0.7	0.05
소멸지역	3.9	94.2	5.1	0.7	0.05

출처: 통계청 MDIS, 전국사업체조사(2020), 마이크로데이터 가공

참고: 종사자 규모 영세기업 1~9명, 소기업 10~49명, 중기업 50~299명, 대기업 300명 이상을 기준으로 정리함.

### □ 산업별 특화지수(LQ)

-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자체별로 산업별 특화지수를 분석하면 농림어업과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특화된 지자체들이 상당수 나타남
  - 농림어업의 경우 60개 지자체가 1.0이상의 값을 보였으며, 특히 48개 지자체는 2.0 이상의 특화도를 보임
  -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82개 지자체가 1.0이상의 특화도를 보임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역시 79개 지자체가 1.0 이상의 특화도를 보였고, 이 중 41개 지자체는 특히 2.0 이상의 값을 보임

$$LQ_{ij} = \frac{Q_{ij} / Q_j}{Q}$$

여기서,  $Q_{ij}$ : i지역 j산업의 종사자수,  $Q_j$ : 전국 j산업 종사자수,  $Q$ : 전국 총종사자수

- 그 외 산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특화도가 매우 낮음
  - 특히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는 거의 모든 곳이 특화도가 1.0 미만으로 나타남
  - 제조업 역시 지방소멸 위기지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으며, 1.0 이상의 특화도를 보인 지자체는 29곳으로 이 중 2.0 이상인 곳은 6개 지자체에 불과함
- 제조업에 한하여 25개 중분류별로 추가적인 특화도 분석을 실시
  - 서비스업과는 달리, 생산물이 다른 지역에서 소비되는 교역(trade) 산업인 제조업은 지역의 기반산업이며, 특히 지방소멸 위기지역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0 이하의 특화도를 보이며, 기반산업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산업별 특화지수(LQ) 현황

구 분	1.0 미만	1.0~2.0	2.0~5.0	5.0~10.0	10.0이상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29	12	33	10	5
광업(05~08)	64	2	10	5	8
제조업(10~34)	61	22	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59	15	9	3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59	24	6		
건설업(41~42)	16	60	13		
도매 및 소매업(45~47)	31	58			
운수 및 창고업(49~52)	68	20	1		
숙박 및 음식점업(55~56)	7	67	15		
정보통신업(58~63)	89				
금융 및 보험업(64~66)	77	11	1		
부동산업(68)	86	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88	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79	9	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10	38	39	2	
교육 서비스업(85)	72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29	54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44	35	8	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38	49	2		

출처: 통계청 MDIS, 전국사업체조사(2020), 마이크로데이터 가공

- 그러나 식료품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이 높은 특화도를 보임
  - 식료품제조업에서는 89개 지자체 중 81개 지자체가 1.0 이상, 75개 지자체는 2.0 이상의 특화도를 보임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역시 60개 지자체에서 특화된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등에서도 많은 위기지역에서 특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경우 원료 집약적인 제조업이 특화된 것을 의미함
- 예를 들어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인구소멸 위기지역이 농림어업에 특화된 것과 관련이 있으며,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의 역시 특정 광물 자원의 분포와 개발권과 관련되므로 일부 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임

〈표 3-7〉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제조업 중분류별 특화지수(LQ) 현황

구 분	1.0 미만	1.0~2.0	2.0~5.0	5.0~10.0	10.0이상
식료품 제조업	7	7	29	42	4
음료 제조업	70	4	8	5	2
담배 제조업	89	0	0	0	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70	9	6	2	2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83	2	2	1	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87	0	1	1	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70	7	8	4	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0	8	1	0	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8	9	2	0	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8	1	0	0	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1	14	2	2	0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6	0	0	1	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0	12	5	1	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18	24	16	2
1차 금속 제조업	75	10	2	1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67	18	4	0	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9	0	0	0	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2	5	2	0	0
전기장비 제조업	86	1	2	0	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4	10	5	0	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8	5	6	0	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1	2	2	2	2
가구 제조업	68	16	3	2	0
기타 제품 제조업	49	21	17	2	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4	25	28	9	3

출처: 통계청 MDIS, 전국사업체조사(2020), 마이크로데이터 가공

### □ 고용의 성장잠재력<sup>3)</sup>

- 지난 3년간 종사자 수의 변화율을 통해 고용의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 현재 지방소멸 위기지역에서 특화된 산업(LQ 1.0 이상)이 아니더라도 특정 산업에서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일자리 수요가 많아 고용의 잠재력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
-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과 지방소멸 위기지역 전체에서는 동일하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종사자가 가장 많이 증가(각각 14.0%, 16.9%)

〈표 3-8〉 고용 성장 1순위 업종 및 지역 현황

구분	고용 성장 지역
농업, 임업 및 어업	(5) 충북 제천시, 단양군, 전북 무주군, 경북 울진군, 경남 창원군
광업	(7)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양구군, 충남 논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영광군, 완도군
제조업	(1) 인천 옹진군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3) 부산 동구, 강원 태백시, 횡성군, 철원군, 충남 예산군, 전남 담양군, 전남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경북 안동시, 영덕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강원 삼척시, 충남 청양군, 경북 영주시, 영양군
건설업	(2) 전북 장수군, 경남 하동군
운수업	(4) 경기 연천군, 강원 양양군, 전남 구례군, 경북 군위군
숙박 및 음식점업	(2) 강원 화천군, 경남 고성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 부산 서구, 충남 부여군
부동산 및 임대업	(6) 전북 부안군, 전남 곡성군, 영암군, 함평군, 장성군, 진도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강원 정선군, 고성군, 충남 금산군, 전남 신안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22) 대구 서구, 강원 영월군, 충북 보은군, 과산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태안군, 전북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전남 보성군, 해남군, 경북 영천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청도군, 봉화군, 경남 밀양시, 함안군, 함양군, 거창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 충북 옥천군, 전북 김제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 충남 서천군, 경북 상주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 인천 강화군, 강원 평창군, 충북 영동군, 전북 진안군, 순창군, 전남 고흥군, 경북 고령군, 성주군, 경남 산청군, 합천군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경북 울릉군

3) 지방소멸 위기지역별 고용 변화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고

- 개별 지방소멸 위기지역에서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2개 지역),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13개 지역),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0개 지역) 등에서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
  - 종사자 수가 증가한 상위 3개 업종 내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존재하지 않음
- 전체 지방소멸 위기지역에서 종사자 수가 감소한 업종은 ‘광업’(-14.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9.5%), ‘금융 및 보험업’(-3.0%) 이 해당

#### □ 고용의 질

- 전체 종사자 중 상용종사자 비율을 통해 고용의 질을 가늠할 수 있음. 이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64.6%의 종사자가 상용종사자로 나타남
- 시도별로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60% 이상의 종사자가 상용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음
  - 서울시와 세종시의 경우 약 70%에 달하며, 인천과 울산, 경기, 충북, 충남의 경우 전국의 값과 비슷한 65% 정도임
- 반면에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경우 상용종사자 비율이 44.4%로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짐작할 수 있음
-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대하여 상용종사자 비율별로 사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함(〈표 3-10〉)
  - 전체 사업체 중 65.7%에서 상용종사자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했고, 약 81%의 사업체에서 상용종사자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함
  - 상용종사자가 70% 이상인 사업체는 20.9%에 불과함

〈표 3-9〉 총 종사자 대비 상용종사자 비율

(단위: 천 명, %)

구 분	계	상용종사자	%
전국	22,723	14,687	64.6
서울	5,227	3,614	69.1
부산	1,465	875	59.7
대구	968	563	58.2
인천	1,092	713	65.2
광주	632	382	60.5
대전	633	402	63.4
울산	533	356	66.8
세종	125	89	71.1
경기	5,303	3,492	65.8
강원	670	372	55.5
충북	741	492	66.4
충남	974	650	66.7
전북	720	439	61.0
전남	774	457	59.1
경북	1,150	723	62.9
경남	1,427	904	63.3
제주	286	163	57.0
소멸지역	473	210	44.4

출처: 통계청 MDIS, 전국사업체조사(2020), 마이크로데이터 가공

〈표 3-10〉 상용종사자 비율별 사업체 비율

(단위: 개소, %)

구분	10% 미만	10~30%	30~50%	50~70%	70% 이상
지방소멸 위기지역	310,871	9,307	16,523	37,667	98,912
	65.7	2.0	3.5	8.0	20.9

출처: 통계청 MDIS, 전국사업체조사(2020), 마이크로데이터 가공

## 제2절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유형화

### 1. 유형화 개요

#### □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유형화

-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향후 예상되는 인구 및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적합한 정책과 전략이 실행되어야 함
- 특히 소비 성향이 높고 인구재생산에 핵심이 되는 젊은 연령층을 유입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일환으로 산업 정책 및 전략이 필요함
- 그러나 모든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동일한 정책과 전략으로 비슷한 효과를 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지역의 인구와 산업적 특성을 바탕으로 적합한 정책과 전략이 투입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지방소멸 위기지역 89개 지자체의 인구 및 산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재해석하며, 각 유형별 적합한 일자리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 유형화 방법

-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적합한 일자리를 모색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통해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분류
- 군집분석이란 말 그대로 수많은 개체를 비슷한 것들끼리 한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때 비슷함 또는 유사성의 개념은 주어진 특성(변수)을 이용하여 개체 간의 거리로 구체화함
  - 거리가 가까운 개체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고, 서로 거리가 먼 개체들을 다른 군집으로 분리

- 두 개체  $\mathbf{x}_1 = (x_{11}, x_{12}, \dots, x_{1p})'$ 과  $\mathbf{x}_2 = (x_{21}, x_{22}, \dots, x_{2p})'$  사이의 유사성 혹은 거리(비유사성)를 측정하는 방법은 유클리드(Euclidian) 거리, 맨하탄(Manhattan) 거리, 피어슨(Pearson) 거리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유클리드(Euclidian) 거리가 주로 이용됨
- 유클리드 거리는 두 개체 간의 최단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공식과 과정은 다음과 같음

$$\left\{ \sum_{k=1}^p (x_{ik} - x_{jk})^2 \right\}^{1/2}$$

-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의 성능( $x_1$ ), 디자인( $x_2$ ) 및 가격( $x_3$ )에 대한 자료에서 세 개의 개체 간의 유사성을 유클리드 거리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mathbf{x}_1 = (x_{11}, x_{12}, x_{13})' = (3, 1, 5)'$$

$$\mathbf{x}_2 = (x_{21}, x_{22}, x_{23})' = (5, 2, 3)'$$

$$\mathbf{x}_3 = (x_{31}, x_{32}, x_{33})' = (3, 3, 1)'$$

$$d_{11} = d_{22} = d_{33} = 0$$

$$d_{12} = \left\{ \sum_{k=1}^3 (x_{1k} - x_{2k})^2 \right\}^{1/2} = \sqrt{(3-5)^2 + (1-2)^2 + (5-3)^2} = 3$$

$$d_{13} = \left\{ \sum_{k=1}^3 (x_{1k} - x_{3k})^2 \right\}^{1/2} = \sqrt{(3-3)^2 + (1-3)^2 + (5-1)^2} = 4.47$$

$$d_{23} = \left\{ \sum_{k=1}^3 (x_{2k} - x_{3k})^2 \right\}^{1/2} = \sqrt{(5-3)^2 + (2-3)^2 + (3-1)^2} = 3$$

- 앞서 기술한 인구와 산업 특성을 토대로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유형분류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총 13개의 변수를 선정
  - 이때 군집 변수의 단위가 다르면 분산의 크기가 다르므로 단위가 큰 변량이 개체 거리(유사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수를 표준화하여 활용

〈표 3-11〉 유형 구분에 사용한 변수 현황

부문	자료
인구 (7개 변수)	인구 및 가구 수, 고령화율, 인구밀도, 인구순이동, 인구증가율, 고학력인구 비율
산업 (6개 변수)	사업체 및 종사자 수, 1차산업 종사자 수, 제조업 종사자수, 도소매업 종사자 수, 숙박업 및 음식점업 종사자수

#### □ 계층적 군집분석

- 계층적 군집분석은 수많은 개체들이 몇 개의 유형으로 묶이는지에 대하여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활용
  - 기본적으로 개체들 사이의 거리행렬을 바탕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개체들을 묶고 멀리 있는 개체들은 별도의 군집으로 구분하는 방식임
- 이때 개체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함

〈표 3-12〉 거리의 종류

종류	내용
최단연결법(단일연결) (nearest neighbor method)	두 군집의 개체 중 가장 가까이 있는 개체의 거리
최장연결법(완전연결) (further neighbor method)	두 군집 개체 중 가장 멀리 있는 개체의 거리
평균연결법 (average linkage)	한 군집의 개체와 다른 군집 개체들의 각 거리 평균
중심연결법 (centroid method)	군집의 평균 간의 거리
중위수연결법 (Gower's median method)	평균 대신 거리 중위수 사용
Ward의 최소분산 기법	군집의 평균간 거리를 각 군집의 개체 개수의 역의 합으로 나눈 제곱근을 구한 거리

- 본 연구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Ward의 최소분산 기법을 활용하여 거리를 측정하였음
  - 이 방법은 군집의 평균과 개체들 사이의 편차들의 제곱합(SSE)을 고려하여, 각 단계에서 두 군집의 병합으로 인한 SSE의 증분(정보의 손실)을 최소가 되도록 군집을 병합함
  - 이 기법은 두 군집  $C_i, C_j$ 의 중심을  $\mathbf{m}_i$ 과  $\mathbf{m}_j$ 라 한다면, 그 거리를 계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음

$$d_{ij} = \frac{\|\mathbf{m}_i - \mathbf{m}_j\|^2}{1/n_i + 1/n_j}$$

- 본 연구에서도 89개 지자체가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것인가가 불확실하므로, 대략적인 유형의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
  - 이를 위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에서 ward's 연결법(최소분산연결법)을 활용하여 군집 유형의 수를 파악
-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몇 개의 군집으로 유형화되는지는 일반적으로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통해 이루어짐
  - 덴드로그램은 군집의 병합 과정과 집단 간 거리를 이차원 도면을 사용하여 간략히 표현한 그래프로써 거리가 가까운, 즉 유사성이 높은 순서대로 개체를 순차적으로 연결하며, 이때 선의 높이는 유사성 크기를 의미
  - 따라서 덴드로그램은 명확한 군집 수보다는 연구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군집 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음

#### □ 비계층적 군집분석

- 비계층적 군집분석은 군집의 중심이 되는 점(Seed)을 선택하여 그 점과 유사성이 높은, 즉 거리가 가까운 개체들을 군집화하는 방법임
- 이를 위해서는 군집의 수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결정된 군집 수를 활용

- 군집의 중심점을 결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k평균법(k-means) 군집분석이 있음
  - k평균법은 계층적으로 군집을 형성하지 않고, 미리 결정된 군집 수를 최적화하도록 군집의 구성 개체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개체를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법임
  - k평균법은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분석 과정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계층적 군집분석에 비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는 점, 내부 구조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어도 의미 있는 자료구조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2. 유형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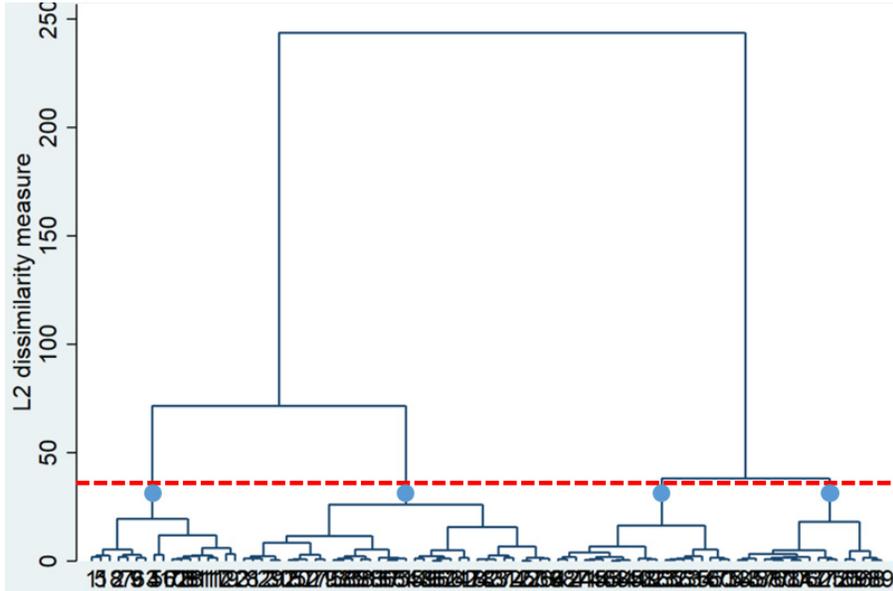
### □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 본 연구에서 89개 지자체를 유형화하기 위한 특성, 즉 변수는 앞서 기술한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인구 및 산업 특성을 활용함
  - 인구 : 인구 및 가구 수, 고령화율, 인구밀도, 인구순이동, 인구증가율, 고학력인구비율
  - 산업 : 사업체 및 종사자 수, 1차산업 종사자수, 제조업 종사자수, 도소매업 종사자수, 숙박업 및 음식점업 종사자수
- 이때 군집 변수의 단위가 다르면 분산의 크기가 달라져 주어진 변수를 최대값과 최소값을 활용하여 0~1의 값으로 표준화하여 활용함

$$Z_i = \frac{X_i - \text{Min}(X)}{\text{Max}(X) - \text{Min}(X)}$$

-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는 덴드로그램을 통해 나타나며, 이를 통해 군집 유형의 수를 결정함
- 인구 및 산업 특성을 변수로 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덴드로그램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그림 3-1〉 계층적 군집분석 덴드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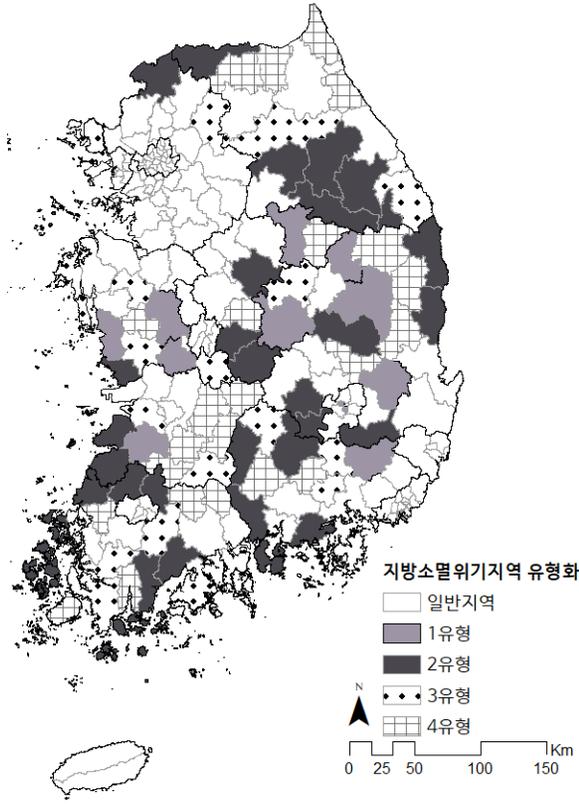
□ 비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 비계층적 군집분석으로 k-평균법(k-means) 군집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총 4개의 유형으로 제1유형에는 15개 지자체가 해당하고, 제2유형에는 31개, 제3유형은 18개, 제4유형은 25개의 지자체로 구성
  - 각 유형에 따라 분류된 지자체 현황은 <표 3-13>과 같음

〈표 3-13〉 유형별 지자체 구성

유형	지역명
1유형 (15개)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대구 서구, 남구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전북 정읍시 경북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경남 밀양시
2유형 (31개)	경기 연천군 강원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충북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 전남 담양군, 보성군, 장흥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경북 의성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경남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3유형 (18개)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강원 삼척시, 홍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남원시, 김제시 전남 고흥군, 화순군, 해남군, 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4유형 (25개)	인천 옹진군 강원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보은군,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강진군, 함평군, 진도군 경북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산청군

〈그림 3-2〉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유형별 분포



### 3. 유형별 특성

#### □ 제1유형 : 서비스업 중심 도시형(15개 지자체)

##### ○ 인구 특성

- 전반적으로 인구 및 가구 규모가 가장 크고, 인구밀도도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방소멸 위기지역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유형임
- 청년 비율이 가장 높고, 고령화율은 가장 낮은 유형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와 고학력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

- 구체적인 지역을 보면 광역시의 자치구와 도농복합시들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소멸 위기지역 중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임
- 다만 인구 유입 및 유출량이 가장 많아 순유출량도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인구 규모와 비례하므로 인구의 소멸보다는 지역 발전의 기회가 더 양호한 유형이라 볼 수 있음

#### ○ 산업 특성

- 산업적으로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제4유형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며, 산업별로 살펴보면 1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와 종사자 규모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전체 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비가 중심인 도시 유형이라 할 수 있음

### □ 제2유형 : 농림어업 중심 농촌형(31개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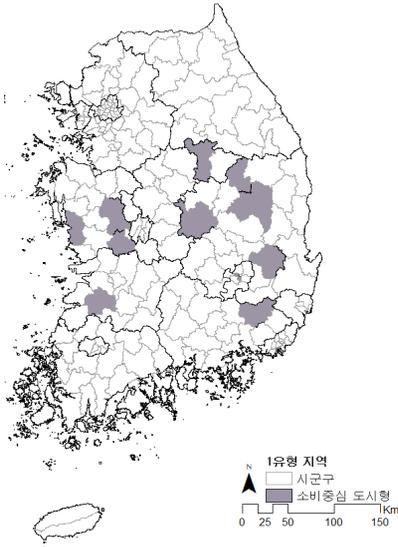
#### ○ 인구 특성

- 제4유형과 함께 청년 비율은 낮고, 고령화율은 높으며,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유형으로 전형적인 농촌의 저밀도 초고령사회의 특징을 보임
- 또한 제4유형과 함께 낮은 고학력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인적자원도 매우 부족한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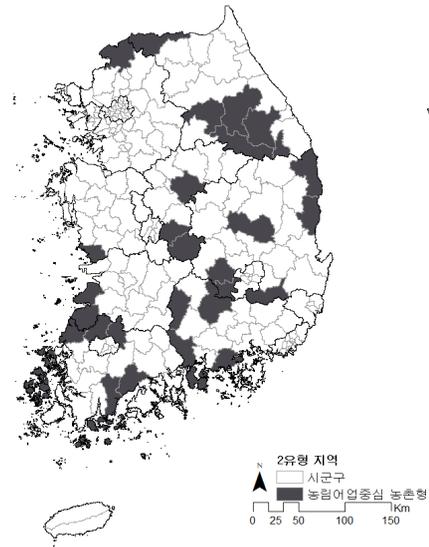
#### ○ 산업 특성

- 제4유형을 제외하면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가장 적으며, 생산연령인구 대비 고용 비율도 가장 낮음
-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지역 내 1차산업인 농림어업이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사업체 수가 평균 58개로 다른 지역 유형과 비교하여 가장 많으며, 특히 산업 비중에서도 사업체 비율이 1.6%, 종사자 비율이 2.0%로 농림어업 비중이 높음
- 농림어업 종사자 기준 특화도(LQ)가 평균 7.8로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특화도를 보임

〈그림 3-3〉 1유형 지역 분포 현황



〈그림 3-4〉 2유형 지역 분포 현황



□ 제3유형 : 제조업 중심 농촌형(18개 지자체)

○ 인구 특성

- 4개 유형 중 인구 및 가구 특성이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평균적인 값과 가장 유사하지만, 인구밀도의 경우 평균적인 값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농촌 지역임을 알 수 있음

○ 산업 특성

- 산업적 측면에서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평균보다 크게 나타남
- 4개 유형 중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비율이 가장 두드러져, 평균적으로 사업체의 11.9%, 종사자의 20.9%가 제조업에 해당함. 이는 다른 유형에서의 제조업 비중과 비교하여 크게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임
- 전국 차원에서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으며(LQ 1.1),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비중은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임

#### □ 제4유형 : 산업기반 취약 농촌형(25개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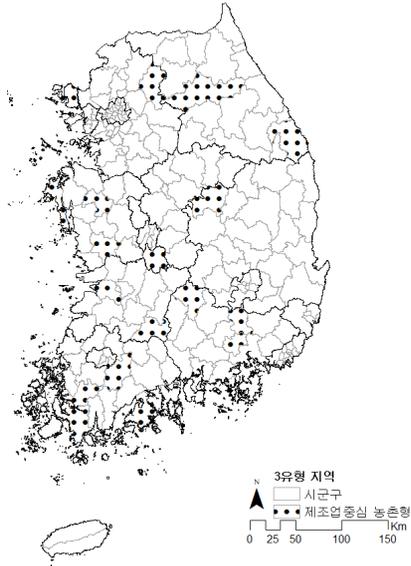
##### ○ 인구 특성

- 평균 인구 및 가구 수가 가장 적으며, 인구밀도 역시 가장 낮은 유형임
- 또한 평균 고령화율이 31.8%로 4개 유형 중 가장 높은 초고령사회이며, 청년비율은 가장 낮아 향후에도 고령화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인구의 유·출입이 정체된 지역으로 인구 순이동이 가장 낮음
- 개별 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며, 특히 일부 지역들은 산간에 위치한 지역으로 나타남
- 이러한 특성을 보았을 때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4개 유형 중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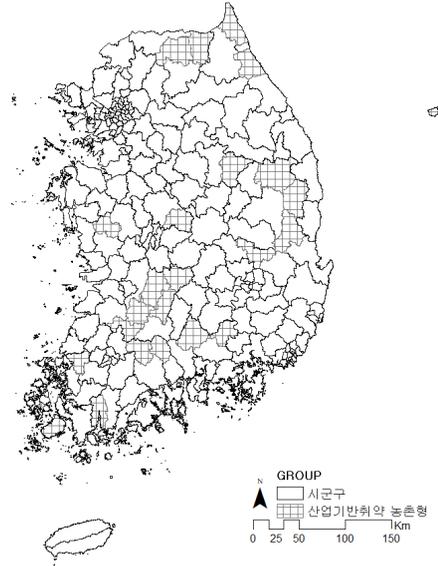
##### ○ 산업 특성

- 제1유형이 산업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었던 것과는 달리 제4유형은 가장 부족한 지역이라 할 수 있음
- 절대적인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가 가장 작은 것은 물론, 농림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비중이 가장 낮음
- 반면에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전국적 차원에서도 특화된 것(LQ 1.4)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절대적인 산업 규모가 매우 적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여가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

〈그림 3-5〉 3유형 지역 분포 현황



〈그림 3-6〉 4유형 지역 분포 현황



〈표 3-14〉 각 군집 유형별 주요 변수의 평균 비교

구 분	지역(군집) 유형			
	1	2	3	4
인구	118,205	42,949	65,373	25,350
가구	51,267	19,149	28,382	11,488
생산연령인구 비율	66.6	60.7	62.5	59.9
청년 비율	16.5	12.6	13.7	12.7
고령화율	24.3	30.8	28.1	31.8
인구밀도	2960	73	99	52
조출생률	4.4	4.4	4.5	4.5
인구 전입량	8,448	3,378	4,721	2,209
인구 전출량	9,551	3,697	5,069	2,498
순이동	-1,103	-319	-348	-289
고학력자 비율	17.7	14.4	15.2	14.9
사업체 수	11,225	4,233	6,250	2,491
고용자 수	50,770	17,718	28,045	10,327
1차산업 사업체 수	29	58	39	24
1차산업 종사자 수	320	325	390	159
제조업 사업체 수	1,149	483	757	236
제조업 종사자 수	8,269	3,085	6,433	1,409
도소매업 사업체 수	3,031	1,026	1,514	574
도소매업 종사자 수	7,656	2,281	3,559	1,208
숙박음식점업 사업체 수	2,245	994	1,476	644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수	5,412	2,353	3,570	1,484
1차산업 사업체 비율	0.3	1.6	0.6	0.9
1차산업 종사자 비율	0.7	2.0	1.4	1.5
제조업 사업체 비율	10.2	11.4	11.9	9.6
제조업 종사자 비율	16.9	16.7	20.9	13.0
도소매업 사업체 비율	26.7	24.0	24.4	22.8
도소매업 종사자 비율	14.8	12.9	13.0	11.7
숙박음식점업 사업체 비율	20.3	23.5	23.5	25.7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비율	10.9	13.4	13.2	14.4
1차산업 LQ	2.7	7.8	5.4	5.7
제조업 LQ	0.9	0.9	1.1	0.7
도소매업 LQ	1.0	0.9	0.9	0.8
숙박음식점업 LQ	1.0	1.3	1.3	1.4
공공행정업 등 LQ	1.5	2.4	1.8	3.5
상용종사자 비율	44.2	44.7	45.0	44.2
일자리/경제활동인구	4.5	4.2	4.5	4.1
사업체 당 일자리 수	65.6	68.4	68.5	67.9
영세업체 비율	93.0	93.0	92.5	93.2
상용종사자 10% 미만 사업체 비율	66.1	65.3	65.3	65.3
상용종사자 70% 이상 사업체 비율	19.9	21.5	21.6	22.1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인구현황」(2020), 「국내인구이동통계」(2020)

통계청 MDIS, 전국사업체조사(2020), 마이크로데이터 가공



## 제4장

# 지방소멸 위기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지역 맞춤형 유형별 전략



## 제1절 기본방향

## 1. 지방소멸위기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 일자리 선순환 체계 구축

## □ 취약한 인구·산업구조를 지닌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일자리 선순환 체계 구축

- 평균 거주인구 약 5만명 규모의 지방소멸 위기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고령 비율이 매우 높고,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유출되는 인구가 많음
  - 인적자본의 수준도 일반지역에 비해 취약한 특성을 보임
- 평균 사업체수도 5천여개로 일반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산업별 구성 측면에서도 1차산업 사업체 비율이 높은 반면, 정보통신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 유망 성장업종의 산업 구성은 일반지역에 비해 낮음
  - 사업체별 종사자 규모에 있어서도 전체 사업체의 90% 이상이 종사자 10명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5명 수준임
- 양질의 일자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아, 많은 청장년층이 지속적으로 지역을 떠나고, 우수한 인재를 고용하지 못하는 지역기업은 성장기반이 약화되어 쇠퇴일로에 있는 악순환의 고리 형성
  -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노동시장은 단기간에 시장의 힘만으로는 인구를 유입할만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한 실정임
-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수인재 영입, 지역기업 성장, 지역인구 지탱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지방소멸 위기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산업 전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지역별로 구체적인 주력산업을 타겟으로 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

- 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지역별 산업여건을 고려하여 대표 주력산업 중심의 산업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성장활력이 회복되도록 함
- 이를 위해 해당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 우수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를 제공, 해당 산업에 필요한 고도화를 촉진

## 2.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주체 연계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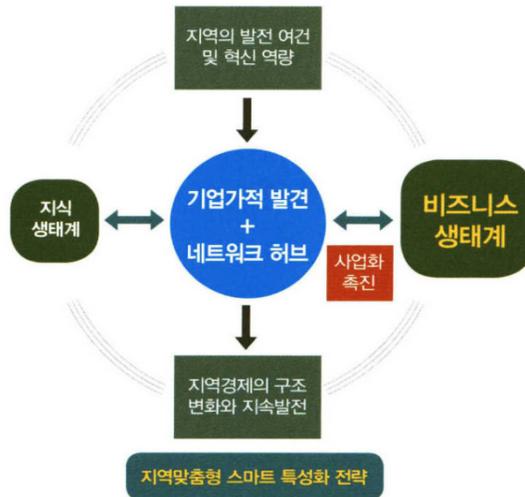
### □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특성화 전략 마련

- 위기에 처한 지역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역혁신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함
  - 새로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EU 등이 제안하고 있는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 전략은 지역의 보유 자원과 혁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 지역의 혁신역량과 산업부문의 특성 및 잠재력을 토대로 하는 스마트 특성화 전략은 지역의 주력산업 및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임
  - 스마트 특성화 전략은 지역혁신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EU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스마트 특성화 전략은 지역의 산업 및 혁신자원에 대한 철저한 현황 분석, 지역의 산학관연의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발전 비전 정립, 기업가적 발견 과정(Entrepreneurial Discovery Process, EDP)을 통한 효율적인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강조
- 이 중에서 기업가적 발견 프로세스가 스마트 특성화 전략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여건 및 혁신역량에 적합한 지역경제의 구조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기업가적 발견은 특화 분야에서의 다양화(Specialised Diversification)를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

- Castillo(2013)는 이를 기회의 창, 특화 분야에서의 기술적 다양화, 기술의 융복합, 혁신 주체의 협력의 4단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기획의 창은 글로벌 가치사슬 차원에서 지역의 비교우위 요소를 탐색하고 성장 유망성을 진단하는 것이며, 특화 분야에서의 기술적 다양화는 특화 분야에서의 성장 유망한 기술적 도메인의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기술 융복합은 특화 분야의 핵심 기술과 성장 유망한 기술 도메인의 창조적인 기술적 융복합을 시도하는 것이며, 혁신 주체의 협력은 기술 융복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관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임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전략 수립시에도 먼저 해당 지역의 산업 및 혁신자원에 대한 철저한 지역여건 분석, 지역의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및 이를 통한 미래 발전전략의 정립, 기업가적 발견 과정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전략의 마련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그림 4-1〉 지역맞춤형 지역혁신생태계 구축방향



자료: 김선배 외(2016)

## □ 지역혁신 주체 연계 일자리 창출전략 마련

- 스마트 특성화 전략에 의한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은 소위 지역맞춤형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이라고 일컬을 수 있음
  - 지역맞춤형 지역혁신생태계는 지역의 발전여건 및 혁신역량에 적합하도록 지역경제의 구조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전략틀임
- <그림 4-1>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지역맞춤형 지역혁신생태계에 있어 지식생태계와 비즈니스생태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혁신생태계의 구축 및 운영이 중요함
  -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기업 및 혁신주체간의 연계·협력 및 융복합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이 필요
- 따라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영역은 지역별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전략이든,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전략이든 이 창조적 결합과정에서 기업가적 발견 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구축 및 작동되어야 함
  - 이때 혁신 주체는 지역의 산학관연의 경제주체들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민간영역의 다양한 사회혁신가들의 혁신역량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이 설계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중앙 주도의 매뉴얼 방식에 의한 소위 승자 선택(Proposal and Winner) 및 일괄 패키지형 지원방식의 사업모델에서 탈피하여, 지역이 컨트롤 타워 기능 확충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사업모델을 발굴하도록 유도
  - 지역 스스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보유자원 가운데 가능성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연관 기업 및 혁신주체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전략이 수립하도록 함

### 3. 지역맞춤형 산업전략에 의한 유형화 전략 수립

#### □ 지방소멸 위기지역 맞춤형 전략 마련

- 지역경제 구조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전략에는 4가지 유형이 제시될 수 있음
  - 지역산업의 고도화, 다각화, 핵심품목 전이, 구조개혁임
  - 지역산업 고도화는 지역의 기존 특화 분야를 유지하면서 기존 활동의 현대화, 정책수단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전략임
  - 지역산업 다각화는 지역의 기존 특화 분야와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를 결합하여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임
  - 지역산업 핵심품목 전이는 지역산업의 특화 분야를 새로운 분야로 전환하는 것으로 새로운 특화 분야의 적소 시장 및 규모의 경제 확보가 관건임
  - 지역경제 구조개혁은 급진적 혁신을 통한 산업부문 및 기술 도메인의 새로운 결합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발전으로 지역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유형임
-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인구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하건데, 지방소멸 위기지역에서 채택가능한 지역산업 전략은 첫째, 지역산업의 고도화 전략과 둘째 지역산업의 다각화 전략임

#### □ 지방소멸 위기지역 유형별 전략 마련

- 지역산업의 고도화 전략은 해당 지역의 기존 특화 분야를 유지하되, 기존 활동의 현대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전략임
-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일자리 창출방안은 지역산업의 고도화 전략을 기본전략으로 채택하되, 스마트 특성화 전략에 입각한 지역의 자율적 전략적 선택에 따라 지역산업의 다각화 전략도 채택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앞선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지역특화도에 따른 유형화에 따르면, 한국의 지방

소멸 위기지역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대별되는데, 3차산업 중심의 도시형, 1차산업 중심의 농촌형, 2차산업 중심의 농촌형, 산업기반 취약 농촌형임  
- 지역산업 고도화 전략에 의한 지역 일자리 전략은 해당 지역별로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중심의 기존 특화 분야를 유지하되, 기존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임

- 한편, 지역산업의 다각화 전략은 지역의 기존 특화 분야와 함께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를 결합하여 다각화하는 전략이므로, 지역특화도 측면에서는 주력산업이 아니나, 지역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산업에 대해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임

## 제2절 지역 맞춤형 유형별 전략

### 1. 기본형(지역산업 고도화)

#### 1) 서비스업 중심 도시형

##### □ 취업 분야 및 지원대상 지역

- 15개 지자체에 소재한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법인·단체

유형	대상 지역	특화 산업
서비스업 중심 도시형 (15개)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대구 서구, 남구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전북 정읍시 경북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경남 밀양시	도소매업 등 서비스산업

##### □ 채용자의 범위

- 연령기준: 사업시행일 기준 만 60세 이하
  -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연령대에 한정(예: 만 39세 이하 청년)한 연령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
- 고용상태: 미취업자(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 □ 지원내용

-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분야에서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 정규직 채용 조건으로 인건비 90%(최대 월 180만 원, 1인당 연 2,160만 원) 지원(3년간)
  - \* 기업(단체)은 임금의 일부(최소 10% 이상)를 부담

### 청년 농수산물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전라남도)

#### □ 추진배경

- 농수산물 유통과 연계한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필요
- 농어촌 고령화, 도-농 간 소득 격차 및 정주여건 격차 등의 해소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전남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청년에게 실질적인 일경험을 제공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사업개요 및 특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농수산물 유통과 연계한 청년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사업대상: 전라남도 거주(예정) 미취업 청년(만18~39세 이하)
  - 사업비: 총사업비 16,072백만원
- 주요내용
  - 청년활동지원단 및 전담매니저 운영으로 청년근로자 활동 지원
  - 농·수·축협, 로컬푸드 등: 청년활동가 배치, 인건비 90%와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지원

#### □ 추진실적

- 4차 혁명시대, 농산물 유통사업 전문 인력양성 및 고용 창출
- 92개 사업장 217명 청년근로자 일자리제공('20.12.31. 기준)

## 2) 농림어업 중심 농촌형

### □ 취업 분야 및 지원대상 지역

○ 31개 지자체에 소재한 농림어업 법인·단체

유형	대상 지역	특화 산업
농림어업 중심 농촌형 (31개)	경기 연천군 강원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충북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 전남 담양군, 보성군, 장흥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경북 의성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경남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농림어업(1차 산업)

### □ 채용자의 범위

- 연령기준: 사업시행일 기준 만 18세 이상
  - 1차 산업의 경우, 재배·관리·수확 등 단순 노무의 성격이 강하여 연령 기준을 폐지
- 고용상태: 미취업자(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 □ 지원내용

- 1차 산업인 농업, 임업 및 어업 분야에서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 정규직 채용 조건으로 인건비 90%(최대 월 180만 원, 1인당 연 2,160만 원) 지원(3년간)
  - \* 기업(단체)은 임금의 일부(최소 10% 이상)를 부담

### 종자생명산업특구 청년일자리지원사업(전북 김제시)

#### □ 추진배경

-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종자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종자산업 인력의 지역 정착 및 종자산업 활성화
-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학생 등 지역인력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종자기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인력고용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 유도

#### □ 사업개요 및 특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종자기업에 청년일자리 창출 정착을 통한 종자인력 안착 및 종자산업 활성화
  - 사업대상: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사업비: 총사업비 337백만 원(국비 169, 도비 21, 시비 85, 기업 62)
- 주요내용
  - 인건비 및 기타지원금(직무교육, 컨설팅, 현장 활동 지원 등)
  - 대상기업 및 업무내용: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입주기업(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등), 종자 파종 작업 및 작물 재배 관리 등
  - (자율지원) 출·퇴근 버스 운영

#### □ 추진실적

- 7개 사업장 13명 일자리 제공
- 농업 관련 고교생 및 대학생의 취업기회 확대

### 3) 제조업 중심 농촌형

#### □ 취업 분야 및 지원대상 지역

- 18개 지자체에 소재한 제조업 법인·단체

유형	대상 지역	특화 산업
제조업 중심 농촌형 (18개)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강원 삼척시, 홍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남원시, 김제시 전남 고흥군, 화순군, 해남군, 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제조업(2차 산업)

#### □ 채용자의 범위

- 연령기준: 사업시행일 기준 만 60세 이하
  - 영세한 제조업체에서는 청년보다는 중·장년층을 선호하므로 연령기준을 완화
- 고용상태: 미취업자(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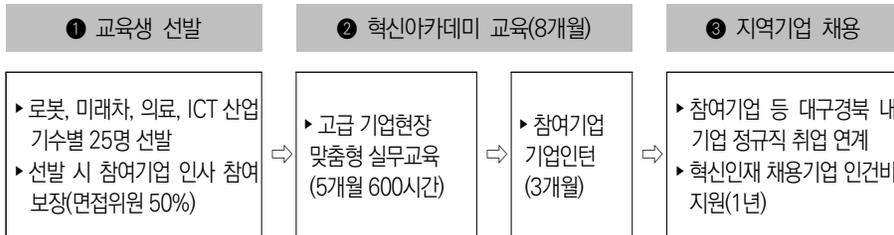
- 혁신주체 거버넌스 구축하여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
  - 지방자치단체-지역대학-지역기업-지원기관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사업 추진
- 2차 산업인 제조업 분야에서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 정규직 채용 조건으로 인건비 90%(최대 월 180만 원, 1인당 연 2,160만 원) 지원(3년간)
  - \* 기업(단체)은 임금의 일부(최소 10% 이상)를 부담

### HuStar 대경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

- 지역 인재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인 기업인턴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채용과 동시에 현장투입과 빠른 직무적응이 가능하도록 참여기업의 정규직 채용과 연계하여 기획
- 사업개요
  - 기간: 2019. 8월 ~ 2023. 4월(1단계)
  - 목표: 혁신인재 3,000명 양성
  - 사업비: 608억원(대구 418, 경북도 190)
  - 주요내용: 대구·경북 미래산업 8대분야 혁신인재 양성
- 추진전략



### 〈HuStar 혁신아카데미 사업추진 흐름〉



**중소기업 청년 Job-School 취업연계 지원사업과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광주 광산구)**

□ 추진배경

- 5개 산단이 위치한 광산구는 가전·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음에 따라 청년층의 취업기피, 기업들의 구인난 및 인구유출 문제 심각
- 산업단지가 다수 분포한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비(월세, 임차료)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고용환경 개선 및 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

□ 사업개요 및 특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역 인재와 매칭하고 일자리 공급과 수요 간 미스매치 해소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출퇴근 불편 해소를 통해 기업의 인력수급 애로사항 해결
  - 사업대상: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사업비: 총사업비 11,482.7백만 원(11,320백만 원, 162.7백만 원)
- 주요내용
  - 인건비 및 기타지원금(멘토·직무교육 지원 등) / 기숙사 월임차료 80%지원(30만원 이내)

□ 추진실적

- 중소기업 42개소 59명 일자리 제공,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 '21년도 상반기(1~6월) 기준 130명(55개사) 월임차료 지원

## 2. 확장형(지역산업의 다각화)

### 1) 지속성장형

#### □ 취업 분야 및 지원대상 지역

- 일반형(농림어업 중심, 제조업 중심, 서비스업 중심) 지역에서 특화도가 높고(LQ 1.0 이상), 종사자 증가율도 높은 산업의 법인·단체

유형	대상 지역	특화 산업
1, 2, 3유형	64개 시·군·구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외 산업

#### □ 채용자의 범위

- 연령기준: 사업시행일 기준 만 60세 이하
- 고용상태: 미취업자(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 □ 지원내용

- 혁신주체 거버넌스 구축하여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
  - 지방자치단체-지역대학-지역기업-지원기관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사업 추진
-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 분야에서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 정규직 채용 조건으로 인건비 90%(최대 월 180만 원, 1인당 연 2,160만 원) 지원(3년간)
  - \* 기업(단체)은 임금의 일부(최소 10% 이상)를 부담

## 2) 신성장형

### □ 취업 분야 및 지원대상 지역

- 산업기반이 취약한 25개 지역에서 종사자 증가율이 높은 산업의 법인·단체
- 일반형지역에서 특화산업 외 종사자 증가율이 높은 산업의 법인·단체
  - \* 특화산업이 아니더라도 최근 3년간 종사자수가 급증하는 성장잠재력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유흥업종 등 부적합업종은 제외

유형	대상 지역	특화 산업
산업기반 취약 농촌형 (25개)	인천 옹진군 강원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보은군,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강진군, 함평군, 진도군 경북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산청군	-
1, 2, 3유형	64개 시·군·구	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 □ 채용자의 범위

- 연령기준: 사업시행일 기준 만 60세 이하
- 고용상태: 미취업자(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 □ 지원내용

- 혁신주체 거버넌스 구축하여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사업 지원
  - 지방자치단체-지역대학-지역기업-지원기관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연계사업 추진
- 성장잠재력이 있는 산업 분야에서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 정규직 채용 조건으로 인건비 90%(최대 월 180만 원, 1인당 연 2,160만 원) 지원(3년간)
  - \* 기업(단체)은 임금의 일부(최소 10% 이상)를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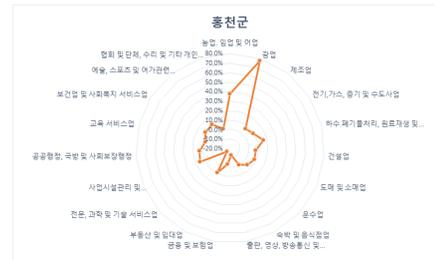
- 강동우·고영우·김현지·남수연·전은하(2018),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 사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구형수·김태환·이승욱·민범식(2016),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2020),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 기획재정부(2020.8), 「2021년 예산안 40대 중점프로젝트 예산」
- 김선배 외(2016), 스마트 특성화 기반의 지역맞춤형 지역산업육성 전략과 과제, 산업연구원
-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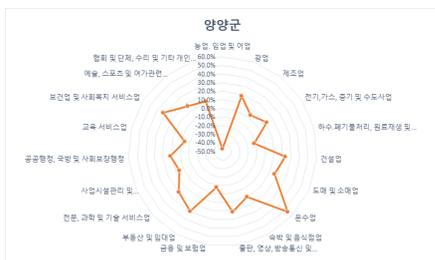


# 부록.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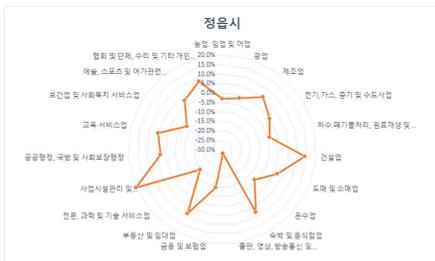
#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적합한 지역일자리 설계방안





#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적합한 지역일자리 설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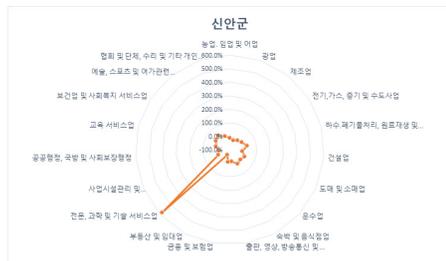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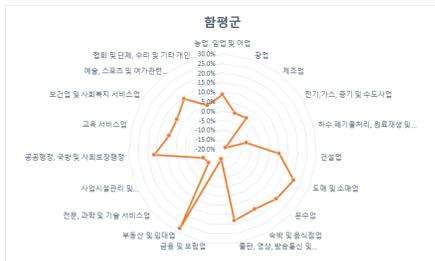


#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적합한 지역일자리 설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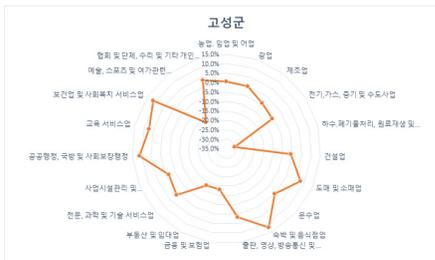
#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적합한 지역일자리 설계방안





#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적합한 지역일자리 설계방안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적합한 지역일자리 설계방안

